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인가?

▶ 4 면

민주노총 파업
올바른 태도와 과제

▶ 6 면

쌍용차
곳곳에서 확산되는 연대

▶ 7 면

한중FTA
또 다른
'자유착취협정'

▶ 5 면

특집
저들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

▶ 11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1)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177200518210031 22

Left21.com

제82호 | 2012년 5월 28일 ~ 6월 10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종북’ 마녀사냥 중단하라 공안정국 조성 시도를 막아야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 물이와 신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미 총선 때부터 ‘종북’ 마녀사냥에 매달려 온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부정 선거가 여론을 타자 몰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황당무계한 소설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이 간첩단 왕재산을 통해 지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석기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했다’는 식이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사퇴하지 않는 것도 “국회에 침투하라는 북의 지령”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진당이 섞인 야권연대가 선거를 이긴다[면] ... 북한 김정은 왕조와 공동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한다.

조중동은 진보운동의 의제들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인양 매도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FTA 반대 투쟁, 반미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은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종북주사파의 국회입성을 막아야 한다’며 난리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는 ‘민주당과 협조해서 이석기·김재연을 제명하겠다’고 나섰다. 제수 성추행 김형태와 논문 표절 문대성 등이야말로 제명돼야 마땅한 데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판이다.

우파는 이석기·김재연을 마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괴물처럼 묘사하며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정치적 잘못을 때문에 진보진영의 비판과 사퇴 요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명백히 기성정당의

부패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말했듯이 “돈봉투를 돌린 분들도 아니고, 성추문을 벌인 분들도 아니고, 논문 표절을 저지른 분들도 아니”다. 반값등록금 투쟁 등에서 진보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사실 ‘종북 주사파’가 아니라 ‘친미 부패 우파’들이야말로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부패 우파는 진보진영을 탄압은커녕 도덕적으로 비난할 자격도 없다.

지금 우파의 칼 끝은 단지 통합진보당 당권파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조선일보>는 뉴라이트의 입을 빌려 “이석기 이런 사람들만 종북인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 범NL이 곧 종북”이라며 마녀사냥 확대를 주문했다. 검찰도 선거 부정뿐만 아니라 “언론에 제기된 의혹”은 모조리 수사하겠다고 한다.

색깔론만으로는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부패’ 덧씌우기도 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서버 침탈 직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 4명이 연행됐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 온 강정마을회 계좌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대구지역 활동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쌍용차 분향소를 폭력으로 침탈했다.

즉, 지금의 탄압은 통합진보당만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 3면으로 이어짐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강제 탈취한 검찰

사진 제공 (인터뷰프로젝트미디어) 정영철 기자

격동의 그리스와 유로존 위기

▶ 관련기사 8 ~ 9, 10 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을 알까요?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
국민경선제 거부한 박근혜

“박근혜와 가장 가까운 ‘초근박’, 그 다음 ‘근박’, 낮에는 친이계로, 밤에는 친박계로 행세하는 ‘주이야박’, 원조 친박은 ‘원박’, 떠났다 돌아온 ‘복박’, 중립에서 친박으로 ‘중박’”
출서기에 바쁜 새누리당의
신종 계보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현 정부만큼 높은 정부가 없다고 봅니다. ... 이젠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재오

“[통합진보당] 핵심 정예들은 북한 노동당 당원일 것”
김문수의 아니면 말고 식 색깔론

“화투는 놀이문화이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스님 도박을 변호하는
조계종 호법부장

“현지 조사단의 유일한 성과는 소사진 찍어온 것”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정부 광우병 조사단 폭행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알 듯 말 듯한 이런 독심술의 시대는 예전에 없었다.”
김문수의 박근혜 비판

“땀을 짓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쥐xx의 고유한 속성”
뒤라 탓하기 힘든
북한 당국의 논평

“한국에서 진보의 시작은 주체사상이 아니다. ... 진보는 다시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조선일보〉, 헛웃음만 나온다

“새누리당에는 눈치 주는 사람과 눈치 보는 사람만 있다. ... 새누리당 사람들 중 박[근혜] 위원장의 눈을 감히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겨레〉 김중구 논설위원의 증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는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김수영의 미발표 시(1960) 가운데,
52년 뒤에도 빛나는 대시인의 통찰력

“남측의 ‘종북’지랄증이 또다시 발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적나라한 비난

“죽으면 나만 죽어? 지들이 받은 게 더 많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이 평소 자주 한 말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칠(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통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썩어빠진 검찰은 통합진보당에서 당장 손을 떼라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 탈취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만행이었다. 검찰은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산동당 서버를 강탈하는 아비한 꾀수를 부렸다. 또 변호인 입회도 없는 막무가내식 폭력 탈취를 자행했다. 항의하던 김제남 당선자는 그 과정에서 감금을 당했고 부상을 입기도 했다. 박원석 당선자는 몸싸움 와중에 경찰에 체포됐다. 수많은 당원들이 경찰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검찰은 다음날 검찰청 현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을 수감까지 채워 강제 진압하고, 그중 네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정

당의 “당원명부는 어떤 경우에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번 일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통합진보당은 법치국가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한다. **떡검, 색검,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등 불법 행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검찰의 이런 행태는 역겹기 짝이 없다.** 검찰은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싼 폭력 사태와 금품 수수가 일상이 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않아 왔다. 특히, 최근 이명박 측근과 친인척을 둘러싼 온갖 비리 수사에서 검찰은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기 바빴다. 이런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태가 더 이상 방

치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둘러대는 것은 기가 막힌다. 마치 자신들이 의혹을 해소하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개입한 척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 은폐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프레시안〉)있었던 이유는 뭘하다. 검찰 총장 취임 일성으로 “종북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한상대도 마찬가지다. 근래 온갖 비리 사건에 죄다 이름을 올려 온 권재진과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 오물범벅의 한상대가 ‘정의’에 관심있을 리가 없다. 비리 범죄자 최시중은 구속 중에도 마음대로 구치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하는 기막힌 현실에서 ‘법치’ 운운하는 것은 구

토나는 일이다. 이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말처럼 “당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진보정당을 지지해 온 공무원, 교사들에 대한 탄압에도 이용될지 모른다. 일부 당원들이 “당원명부가 어느 기업에 넘어가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도 기우가 아닐 것이다. “13년 동안 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한 20만 명이 넘는 이들의 기록”을 검찰과 지배자들이 어떻게 악용할지는 예측 불허다. 일종의 ‘진보진영 지형도’를 입수한 저들은 이것을 이용해 온갖 악랄한 공작과 탄압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통합진보당에서 당장 손을 떼도록 만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

김재현



사진 출처: Jeremy Farmer (블리카)

반전 시위에 강타당한 시카고 나토 정상회의

5월 20일 시카고의 나토 정상회담장 밖은 약 1만5천 명쯤 되는 반전 시위대로 가득했다. 세계 지도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모였고, 회담장 주변을 대규모 경찰기동대와 높다란 방벽으로 둘러쌌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대가 몰려들

었고, 그 가운데는 시카고의 ‘점거하라’ 운동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참전 군인들도 참가했고, 그들은 항의의 뜻으로 자신들이 받은 메달을 거리에 내던졌다.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브래들리 매닝에게 연대를 표하는 팻말을 들었다.

매닝은 위키리크스에 미국 외교 전문을 누설한 혐의로 감혀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무지막지하게 공격했다. 경찰은 “음향 대표”를 사용해서 해산하지 않고 버티는 시위대를 괴롭혔다. 시카고 시위는 전세계에서 펼쳐진

반전 시위의 일부였다. 런던에서도 수백 명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토는 ‘2년 내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을 합의하며 자신들의 패배를 재확인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4호 / 번역 정종수



사진 출처: 강태영(윤커버)

제주도청 앞 항의 시위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우근민은 뒤통수 그만 치고 물러나라

김지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참가자. '제주 해적 기지' 표현으로 해군 당국이 고소해 법적 대응 준비 중

경찰 당국이 기부금품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주 강정마을회 후원계좌 조사에 나섰다. 2007년에 시작한 후원금 모금을 갑자기 문제 삼으며 운동을 옥죄려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지지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당연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24일 제주도지사 우근민은 ‘해군기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끝내 본색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정 주민들과 운동 참가자들은 분노를 터뜨

리고 있다. 문정현 신부는 페이스북에 “사기꾼 지사가 사기꾼 해적과 놀아나다”라며 우근민을 비판했다. 강정 마을 대표자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삭발을 하고 우근민 퇴진 운동을 선언했다. 강동균 회장은 “제주도민을 상대로 우근민 퇴진을 위한 대도민 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근민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다”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변명이나 하고 있다. 우근민은 거듭해서 이런 죽도 밥도 아닌 태도로 일관하며 운동의 김을 빼는 구실을 해 왔다. 강정마을회는 “청문이 끝나면 공사정지 명령을 지체 없이 내려야

했는데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며 “그사이 해군은 구럼비를 발파하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우근민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오락가락하며 뒤통수나 쳐 온 우근민이나 민주통합당에 기대지 말고 저항을 확대할 필요는 더 분명해졌다. 5월 21일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천주교연대’가 서울 도심에서 강정 마을 군사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연 미사에 5백여 명이 참가한 것은 서울 도심에서 운동 건설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명박 정부가 악랄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 만큼 정부에 맞서 서울에서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불법사찰 진경락 문건

이명박이 몸통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다

청와대 불법 사찰의 몸통이 이명박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문건이 5월 15일 폭로됐다.

불법 사찰 증거물 폐기 혐의를 뒤집어 쓰고 구속됐었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경락이 숨겨놓은 파일이 발각된 것이다.

이중 2008년 8월 28일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VIP[이명박]께一心[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라고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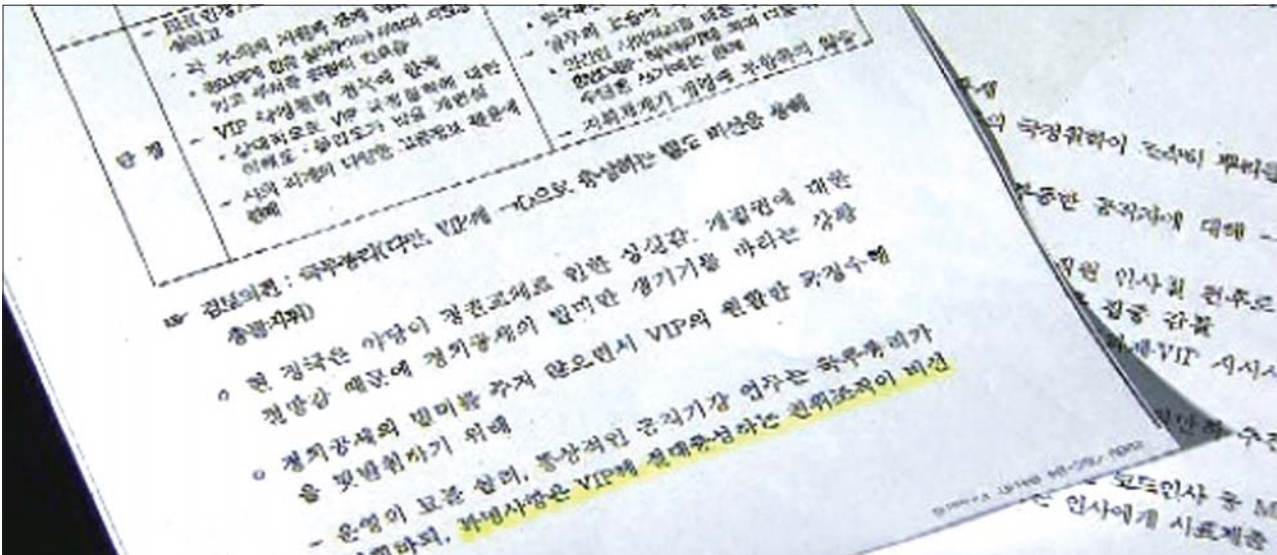
또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청와대]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 “기획 총괄하는 국과장 인사는 BH에서 직접 챙겨야” 등의 표현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번에 두 번째로 구속된 진경락은 최근 교도소 면회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현 정권이든 MB든 불살라 버리겠다”고 했다고 한다.

즉, 이명박의 지시로 ‘영포라인’ 등 중성과 라인들로 비밀 조직을 만들어 이를 국무총리실로 ‘위장 전입’시킨 뒤, 이명박의 “하명”에 따라 정권 차원에서 반대자들을 사찰하고 탄압해 온 불법 사찰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기가 막히게도 집권 우파와 조중동 등은 통합진보당 사태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돌리면서 이런 중대한 폭로가 낳은 위험에서 빠져 나가려 한다.

이런 천인공도할 범죄적 시도를 결코 두고 봐선 안 된다.



‘화장실에서 웃는 이명박’ 이명박의 퇴진 사유가 더해지고 있는데도 공안 탄압으로 벗어나려 한다.

왜 우파는 마녀사냥과 진보 탄압에 필사적인가

통합진보당 사태를 위기 탈출의 계기로 삼으려는 집권 우파의 시도는 매우 필사적이다.

이것은 우파의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2010년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던 세계경제 위기가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강화로 추락을 피해 온 한국 자본주의에게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커다란 위협이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퇴출은 권력 실세들의 복마전 같은 비리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연계된 경기부양책의 실패와 거품 붕괴의 심각한 위험까지 경고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줄지 않는데,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고,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경제 위기와 생활고는, 기층의 불만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고 노동자투쟁을 자극할 수 있다. 경제 위기 대처 방안을 놓고 지배계급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부패 비리가 계속 밝혀지는 것은 집권 우파들에게 치명타다.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 있고 부패와 실정으로 지독한 원성의 대상이 되면서 박근혜도 정권과의 차별화 압박을 더 크게 받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과 우파 내부, 심지어 친박계 안에도 균열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처지니 우파에게 언론 파업, 쌍용차 해고자 투쟁 등에 사회적 지지가 커지는 것이 두려울 테고, 두 배로 의식을 높린 통합진보당도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결국 집권 우파는 자신들의 위기와 분열을 벗어날 효과적인 길은, 통합진보당의 위기를 한껏 이용하며 공안 탄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법하다.

우파는 우선, 통합진보당 사태를 더 추악한 자신들의 처부를 감추는 데 이용하고 있다.

파이시티 사건은 대선자금 문제라는 뿌리로 나가지 못하게 은근슬쩍 개인 비리로 덮어버렸고, “정권 실세들의 다치고 먹자판”이라는 저축은행 비리도 묻히고 있다.

둘째, “종북 좌파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내세워 분열 위기에 놓인 우파의 결집을 유지하려 한다. 반면에 당권파와 비당권파, NL과 PD 등을 이간질하며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한다.

셋째, 우파는 민주통합당에게 야권연대로 ‘종북 좌파’가 정부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며 압박을 하고 있다. 조중동은 ‘종북좌파’ 이석기를 노무현과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면복권시켰다며 공격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당원명부로 이석기 당

선자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사상 검증을 통한 국회 제명이 실패할 경우 국회에서 제명할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결국 우파의 전략은 진보정당을 마녀사냥하고 민주당을 길들여서 사회 세력 관계에서 우파의 우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권재창출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저들의 의도대로 우파가 권력을 연장하면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각종 개악도 지속될 것이다.

신경질적

그러나 사실 이런 도발은 도박에 가깝다. 자칫 하다간 거둬 확인된 청년세대의 반우파 정서와 노동자 투쟁이 만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의 공격도 그토록 신경질적이고 필사적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총선 이후 행보가 이런 우파의 전략 추진을 수월하게 해줬다.

최근 유출된 ‘4·11 총선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민주당은 ‘좌파향으로 중도층 유권자를 우파에게 뺏긴 것이 총선 패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4·11 총선에서 일관된 진보, 일관된 보수로 ... 정의할 수 없는 ‘이념적 혼재층’이 51.7퍼센트로 대폭 증가했



침묵만도 못한 이명박 정부 경찰은 쌍용차 분향소를 부수 연대의 초점이 되는 걸 막으려 했다.

사진 제공 인터넷포스트미디어(이) 정의의 기사

▶ 1면에서 이어짐

우파는 이런 대대적 공격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자신들의 더러운 비리를 덮어버리고, 노동자들의 투지를 꺾어버리고 싶어 한다. 또 정권에 대한 진보의 예봉을 무디게 하며,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

근래 주가폭락으로 드러난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우파를 더 반동적하게 만들고 있다. 조중동과 우파는 대선을 앞두고 더 큰 조직 사건과 마녀사냥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과 공안몰이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 점에서 최근 진중권 교수가 통합진보당 이상규 당선자에게 복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식의 태도를 취한 것은 부적절했다. 일부 진보 인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복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부적절하다.

물론, 선거 부정과 폭력 사태 등은 유감스런 일이었고 진보진영 자체 정화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진보정치의 쇄신은 결코 우파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없다.

수만 배는 더 더러운 자들에게 진보의 정화를 맡길 순 없다. 우파와 공안당국의 개입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히려 진정한 진보의 쇄신을 가로막을 뿐이다.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오로지 진보진영 내부에서 원칙과 대의에 입각해서만 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단결해서 함께 광기어린 공안몰이에 맞서야 한다.

김문성

김재현

폴라주 ⑦⑤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통하였느냐?



illusion

통합진보당의 위기 — 올바로 보기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심장”인 당원명부를 강제 압수했다. 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해 있는 틈을 이용해 결정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도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원내 입성을 막겠다고 했다.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는 두 당선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지만 우파에 의한 원내 입성 저지는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한구의 발언은 이 나라 주요 지배자들의 의도를 대변한다. 통합진보당의 제도권 진출을 봉쇄하겠다는 목표 말이다.

성공 여부는 완전히 별개지만,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참에 통합진보당을 와해시켜 권권 교체를 저지하고 싶어 한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공동정부 구성은 지배계급에게는 피하고 싶은 끔찍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노동자 운동은 완전히 다른 이유, 곧 통합진보당의 공동정부 참여는 그 당 지지자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선거 부정 사태에 이은 구당권파의 중앙위원회 폭력 행사 등 때문에 실망감과 환멸감을 느낀 나머지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방어를 내켜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비판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자신감을 얻어 탄압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미 해방연대와 대구 청년단체가 연달아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신상 털기

우익은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 문제를 ‘종북’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사태의 진실은 그들의 관심 밖이다. 오로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만 있을 뿐이다. 우익 언론의 이석기·김재연 당선인에 대한 ‘신상털기’는 소름끼친다.

재수 없게도, 반우파 지식인인 진중권은 우익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적의 힘을 빌려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듯이 말이다. 그는 북한 스탈린주의자들과 남한 스탈린주의자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는 북한의 지배계급인 반면, 후자는 남한의 피지배 계급 운동의 일부다.

그러나 ‘종북’ 문제는 통합진보당 사태의 핵심도, 발단도 아니다.

비례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정·부실이 많았고 그 결과 선거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상실됐으니 경선참여 후보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사태의 골자다.

따라서 선거 부정 규모를 제기하는 것은 쟁점을 비트는 것이다. 구당권파는 선거 부정은 있었으되, “총체적”이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부정의 규모가 10퍼센트라고 치자. 어쨌든 선거 부정 사실은 있었던 것 아닌가. 또,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과연 ‘드러난 게 전부일까’ 하는 의심을 할 법하지 않은가.

게다가 통합진보당 부정 선거의 핵심은 온라인 투표다. 누군가 수차례 소스코드를 열어 봤다는 것이고, 이것이 투표 결과에 모종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운동권의 관행”쯤으로 보는 것은 완전 잘못됐다. 이 정도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다. 그것도 스탈린주의자들(NL)이 선거주의에 눈이 멀어 합법적 대중 정당 안에서 저지른 선거 부정이다.

개혁주의(사회민주주의)가 이번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보는 시각은 그래



“혁신”을 약속하며 고개 숙인 강기갑 비대위 당권 투쟁이 아니라 선거 부정에 의해 훼손된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야 한다.

서 잘못됐다.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중시한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계속 확장되면 사회주의(지금도 사회주의라는 말 대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쓰지만 말이다)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때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선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스탈린주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정치다. 스탈린주의는 위로부터의 사회주의다. 그것이 군대든 탱크든 아니면 소수 지식인이 농민 군대를 이끌든지 간에 소련과 같은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계급이 혁명으로 세계를 바꾸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무시한다.

한편, 스탈린주의는 개혁주의 자체는 아니며, 그들의 개혁주의는 인민전선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한

다. 가령, 통합진보당은 스탈린주의자들이 이끄는 개혁주의 정당이다. 이런 모순은 사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속돼 온 것이다. 모순은 불안정성을 낳는다. 2008년 분당이나 이번 현재 통합진보당의 위기처럼 말이다.

꼬여가는 사태

선거 부정에 의해 파손된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가 순식간에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면서 사태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구당권파는 현 사태를 신당권파가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신당권파에 의한 “쿠데타”라는 것이다. 문제는 신당권파도 이번 사태를 당내 주도권 장악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사태 해결은커녕 상황이 계속 꼬여가고 그에 따라 진보적 노동 대중의 환멸도 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해 구당권파는 이 사태의 본질을 노선 대립으로 치장하기 시작했다.

강기갑 비대위의 혁신 방향이 우경적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물론, 신당권파 지도자들이 좌파적이지는 않다. 유시민의 애국가 발언이나 주요 인사들의 연립정부 프로젝트 등을 보면 신당권파가 좌측 통행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석기 당선인도 당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다고 했고, 연립정부 프로젝트는 구당권파도 지지한다. 사실, 연립정부는 스탈린주의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프로젝트다.

따라서 구당권파가 이번 사태를 마치 좌우 투쟁인 양 치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정작 강기갑 비대위의 문제는 “혁신”의 내용이 도통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말은 많지만, 선거 부정에 의해 훼손된 정의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로 세울지는 없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인의 사퇴 압박에 다 걸기를 하는 듯한 인상이다.

이런 대결 양상이 물리적 분당으로가

지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에는 이미 두 개의 당 조직이 존재한다 — 통합진보당 신당권파,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한편, 부정 선거 사태로 인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진보적 다원주의 정치 방침을 채택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단결에 이로울 것이다. 다만, 선거 방침은 노동계급의 계급투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투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바람직하게는, 전현직 민주노총 리더들이 노동계 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대안이다. 그리고 그 당은 참여 세력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과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전선적 모델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 모델보다는 공동전선 모델이 패권주의 폐해를 완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김민식

‘종북’ 마녀사냥, 어떤 관점으로 대처할 것인가

최근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때문에 진보 대중이 크게 실망하자, 그 틈을 타서 우파들이 ‘종북’ 마녀사냥에 나섰다. 즉, 우파들은 인민이 굶주리는 와중에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독재 국가 따위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느냐며 남한 NL 세력의 약점을 파고 들고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내 NL 세력들이 북한 지배자들을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비방하면서, “종북주의자는 북한에 대해 지도자, 세습, 북한 체제, 주체사상, 인권탄압 등 다섯 가지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다. <조선일보>는 “종북주의를 진보라고 믿는 세력이 한국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다”며 진보 정치인 사상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북한 체제가 매우 억압적이고, 우리가 북한 지배 관료들과 그 체제를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 관료들을 비난하는 남한 우파들의 행태는 정말 위선적이다. 마르크스가 “한편에 자본의 축적, 다른 한편에 빈곤의 축적”이라고 표현한 상황은 북

한 뿐만 아니라 바로 남한의 현실이기도 하다.

북한 3대 세습 못지 않은 삼성의 3대 세습 등 남한 지배자들도 부와 권력을 자식들에게 되물림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노동자를 착취·억압하며, 민주주의를 거추장스러워하는 점에서도 남한 지배자들은 북한 관료들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김영환, 하태경 등 뉴라이트들은 북한 노동계급이 스스로 해방될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 군대나 남한 군대 같은 외부 세력이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어서, 북한 민중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지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들의 대안은 남한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일부 진보 인사가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다. 얼마 전 MBC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당선자에게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며 사상 검증을 요구했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남한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과거 냉전 시절에 서유럽 좌파들이 이런 관점 때문에 서방 자본주의에 정치적으로 투항한 바 있다. 당연히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북한 내에서 피억압 대중 자신의 저항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결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중에는 아예 북한 체제를 남한 자본주의보다 후진적인 봉건 왕조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아니다. 두 차례 핵심함에 성공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자체 개발했으며,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북한이 봉건 사회일 리가 없다.

반대로 NL 동지들이 북한을 남한보다 더 우월한 사회주의 사회로 여기는 것도 많은 문제를 낳는다. 이런 관점은 ‘사회주의’를 정치범수용소, 심각한 기아, 3대 세습 따위와 동의어로 만들어 버리는 우파에 맞서기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탈북민들의 권리를 방어하지 않고, 사실상 중국 정부의 탈북민 복송을 지지하는 NL 동지들의 태도는 남한 우

파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행세하게 해 준다.

북한을 비판하면 미 제국주의와 남한 우파에게 득이 된다는 식의 논법은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가서 살아라’ 하는 우파의 논법을 뒤집어 놓은 꼴이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즉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원칙에 비춰 보면 북한은 절대 사회주의 사회일 수 없다. 북한 관료들이 세계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의 압력을 받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라고 분석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북한 노동계급에게 게걸음과 다름 바 없는 시장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진정한 대안일 수 없다. 북한 노동계급이 스스로 해방을 위해 싸울 잠재력이 있음을 봐야 한다.

우리는 미 제국주의와 남한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고 우파들의 ‘종북’ 마녀사냥에 맞서면서도, 북한 노동계급의 지배 관료에 맞선 자기해방 투쟁을 관점에 서야 한다.

김영익

한중FTA — 또 다른 ‘자유착취협정’

5월 14일 베이징에서 한중FTA 1차 협상이 열렸고, 7월 초에 2차 협상도 열릴 것이다. 만약 중국과 FTA를 맺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 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들과 모두 FTA를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미FTA와 한EU FTA 발효 뒤 한중FTA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듯한 분위기가 한중FTA를 적극 추진하게 한 핵심 동력으로 보인다. 유로존의 위기로 중국의 수출은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은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FTA를 맺어 “안정적인 시장 창출”을 하려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외교 안보적’ 고려를 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맞서 중국 지배자들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에게도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국 지배자들은 중국 시장에서 대만, 일본 등 주요 제조업 경쟁국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한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미국과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상하는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높은 수준의 FTA’

그러나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한중FTA도 **피역압 민중의 삶과 사회 공익,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협정**이다.

5월 2일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두 정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개방 의무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즉 한미FTA처럼 한중FTA도 서비스·투자 분야 등에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 정책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기본적으로 한중FTA에 비판적이면서도, 중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한중FTA는 공공서비스 개방과 민영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의 중·아세안 FTA, 중·대만 ECFA에서 하수 처리, 환경, 병원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협상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한중FTA에는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ISD) 같은 대표적 독소조항들이 포함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기존의 양자 투자협정(BIT)과 FTA에서 ISD를 포함해 왔다.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 절차를 밟은 게 알려진 것만 2건이다. 예컨대 한 중국 기업은 ISD를 이용해 페루 정부의 “부당한 과세”를 문



FTA가 선진국가로 가는 길? 한중FTA든, 한미FTA든 1퍼센트를 위해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협정일 뿐이다.

제 삼았다. 이처럼 중국 기업이 ISD로 한국의 공공 정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한중FTA가 시행되면,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먹튀’를 한 상하이차 같은 사례들도 더욱 늘어날 게 뻔하다.

무엇보다 “한중FTA는 한국 경제 및 산업 구조에 엄청난 구조조정 압력을 줄”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한중FTA 의의와 주요 쟁점’). 한국 지배자들이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해 온 것도 ‘외부 충격’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미 서강대 허윤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중FTA, 한중일FTA에 대비한 ... 뼈를 깎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중FTA도 국내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화, 외주화 등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엄청난 압력을 줄 게 분명하다.

한국이 중국보다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절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하고 나서 임금이 낮은 멕시코와 경쟁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

막았다. 하물며 “중국은 국유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백만 명을 감원하는 과단성을 보여 준” 나라다. 한중FTA는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 모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게 받으라는 압력을 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피역압 계급의 관점에서 한중FTA도 원칙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한겨레>처럼 주되게 산업별 이해득실을 따지는 관점은 위험하다.

물론 산업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의 일부도 한중FTA에 소극적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한중FTA가 “한미 동맹의 측면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FTA를 통해 주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신자유주의적 통상 전략에 대해 여전히 지배자들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를 추진한 ‘원죄’가 있고, 김진표 같은 자들이 포진한 민주통합당을 믿어서도 안 된다.

한미FTA든, 한중FTA든 1퍼센트 지배자들이 99퍼센트 민중을 상대로 하는 ‘자유 착취’협정일 뿐이다. 한국과 중국 민중에게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강요하고, 제국주의적 경쟁과 긴장을 격화할 한중FTA를 지지해야 한다.

김영익

한일 군사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

사라지지 않는 위험

정부가 광범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인데, 이는 사실상 전면적 군사동맹의 전 단계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 공동훈련 등에서 한국군과 자위대 간의 물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평상시 인도적, 재난 구호 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군사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에 대한 군사력 투입은 유사시 ‘자국민 보호와 구조, 전후 복구’ 같은 ‘재난’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군사전문지 <디펜스21>의 김종대 편집장은 “정보교류와 상호군수지원은 유사시 한일연합작전을 위한 근거가 된다”며 특히 “일본이 항상 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도를 보여 왔고 이 협정이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통해 자위대 해외 파견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한일 군사협정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 지긴 했으나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두 협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바라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희망해 왔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미 합참의장 마이크 멀린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벌어진 일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일 군사협력은) 미국 정부가 강력히 요구해 온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1년 국가군사전략”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안보관계를 증대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적 안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말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제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미사일방어체제(MD)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MD 구축을 위해 ‘한-미-일’과

‘미-일-호주’ 두 축으로 3자 대화를 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비어 있는 한 고리를 완성하고자 한다.

실제로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2010년부터 눈에 띄게 증대해 왔다. 급기야 한미일은 오는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일 군사협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명백하다.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가 강화되면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북방’ 삼각체제 강화가 모색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정을 더한층 심화시킬 한일 군사협정에 반대해야 한다.

이현주

계간

마르크스21

13호 2012년 봄/여름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이론과 실천의 통일

특집 오늘의 세계 상황

경제 위기, 혁명, 그리고 전쟁에 관한 소문들

중국과 세계경제 위기

오늘날 중국의 현실

논쟁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

진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적 해설을 위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앤드루 클리먼의 최근 논의 검토

쟁점

한국 복지국가 논의 지형과 좌파의 과제

한국 여성 노동의 현실과 투쟁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2. 1930년대의 대불황

서평 (6월 항쟁: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장엄한 민중항쟁에 대한 탁월한 보고서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민주노총 파업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정종남

언론 파업, 쌍용차 투쟁 연대가 확산되고, 화물연대·금속노조 등이 투쟁 조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정치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기층에 분노는 쌓였지만 투쟁이 부족해 의기소침하던 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이명박과 지배자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물론, 아직은 정치파업은 ‘계획’이고 결과를 담담하기는 이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새로 열린 이 기회를 확실한 전환점으로 만드는 노력이다.

더욱이 경제가 급락하면 저들은 전면적인 고통선거에 착수할 것이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도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 호소는 매우 타당하고 전폭 지지받아 마땅하다.

‘여소야대 실패’와 ‘동력 부족’을 탓하며 미온적인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총선 이후에도 투쟁은 명백히 전진하고 있다. 언론 파업과 쌍용차 연대 투쟁은 투쟁의 도화선 구실을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투쟁, 영리병원 반대 투쟁 같은 새로운 싸움도 시작되고 있다. 국회 개혁입법 관철 여부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 수준에 달려 있다.

오랫동안 누적이된 공격과 위축으로 노동자들의 사기가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러 차례 투쟁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유지해 온 화물연대나, 경기 호황으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사기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불균등하고 불충분하다.

정치적 연대

그러나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비판하기보다는 투쟁을 호소하고 조직하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동력을 끌어 올릴 것인가다.

위기에 몰린 우파 정부가 공안 탄압을 시작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이에 앞장서 맞서며 진보의 힘과 자신감을 결속시켜야 한다. 저들의 공격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도록 정치

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도 파업을 제대로 조직해야 한다. 현장의 투사들도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을 활용해 작업장에서 투쟁 조직의 구심이 되어 한다. 업종과 요구가 달라도, 함께 투쟁함으로써 투쟁이 상승할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언론 파업, 쌍용차 투쟁 연대를 시작한 것은 중요하다.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노총 파업을 조직할 확실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같은 상층의 연대 기구만이 아니라, 기층에서도 조직과 연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현장의 투사들은 작업장 내에서도 서명전, 강연회, 집회 참가 등을 적극 조직하며 단결 투쟁의 기운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부문주의를 경계하고 단결을 촉구해야 한다. 지배자들은 언론, 화물, 금속, 건설 등의 투쟁을 낱알으로 분리시키고 각개격파하고 싶을 것이다. 각각의 투쟁을 연결하고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지역과 대학 등에서도 연대 투쟁을 위한 조직과 지지 활동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절 집회에서 정치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 노동자들. 현안 투쟁을 서로 연결하고 정치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좌파의 전술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민주노총의 파업은 현장 조합원들보다는 지도부의 주도력에 의존해 조직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 좌파 활동가들은 민주노총과 상급노조 지도부가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던 과거를 떠올리며 못 미더워 한다.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부의 자기 제한적 자세를 경계하고 조합원들의 자발성을 고무하는 것은 옳지만, 투쟁을 조직하는 지도부를 지지하길 꺼리는 것은 잘못이다.

일부 좌파들이 파업의 성격을 칼같이 구분해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노조 지도부의 구실을 일면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조 지도부는 정부나 사측의 압력

을 받고, 또 조합원들로부터도 압력을 받는다. 이 때문에 투쟁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투쟁을 조직한다는 점을 봐야 한다.

노조 지도부는 노조 기구 자체가 탄압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응할 필요를 느낀다. 이번 민주노총 파업에 상급노조 지도자들이 열의를 보이는 배경에도 이와 비슷한 요소가 있다. 타임오프,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비롯한 노동 악법들과 신자유주의 조치들이 노조 기구 자체를 공격해 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계획에 따른 관료적 파업일지라도 좌파들이 어떻게 개입해 투쟁을 전진시킬 것인가다.

노조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관료적 대중파업과 현장 조합원들이 주도권을 원자발적인 대중파업 사이에 만리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투쟁이 발전할 경우 현장 조합원의 주도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이 그랬다. 이 파업은 처음에 노조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됐지만,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아래로부터 대중파업으로 발전했고, 결국 승리를 거뒀다.

따라서 좌파는 지금보다 확실한 전진인 관료적 파업을 지지하고 그것을 이용해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주도성을 고무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향후 노조 지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온건화 압력과 머뭇

거림과 후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유에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투사들은 벌써 2년째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관료적 대중파업에 개입해 왔다. 25년 만에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 영국 노동자들은 연금 공격에 분노하고 있지만, 자신감 회복 수준은 불균등하고 불충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가들의 개입이 투쟁의 전진에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좌파들은 파업을 조직하려 노력하는 지도부와 ‘함께하면서 맞서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업 지지 활동을 위한 공동 투쟁체를 형성해 협력적으로 투쟁 조직에 나설 필요도 있다.

민주노총 정의현 수석 부위원장

“현안 투쟁 연대가 민주노총 파업 건설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권이 거칠게 탄압해 왔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그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더는 내줄 것도 없고, 정권 교체를 맞아 이 기회에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을 자신감을 회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도 이명박 정권에 맞서 반전을 꾀할 기회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되지 못한 게 파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대중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소야대 국회가 안 돼서 더 싸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선 각 산별 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의 요구·투쟁을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조직의



정의현 수석 부위원장

구심력이고 지도력인데, 10년 동안 약화되고 이완돼 온 과정이라서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어려울 것입니다.

통합집보당 문제도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정부의 탄압은 통합집보당 내분을 계기로 민주노총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선에서 진

보진영을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조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파업은 어떻게 조직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6월 말 경고 파업과 8월 파업입니다. 6월 말에는 가능한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 또는 공동의 행동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앞에 집결해 대정치권 투쟁을 힘 있게 결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파업에 대한 집단적 결의를 할 것입니다.

8월에는 각 노조의 입단협(금급·단체협상)과 상관없이, 민주노총이 중심에 선 정치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성사시키려면, 쌍용차 투쟁, 언론 파업과 같은 현안 투쟁을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8월 투쟁의 자신감을 높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투쟁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

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안 투쟁 연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쌍용차 투쟁에 대한 향후 계획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처럼, 죽음을 막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해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세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있듯이, 국가가 공기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는 결국 민주노총의 문제

입니다. 우리의 힘을 그에 걸맞게 결집시켜 함께 싸우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쌍용차 범국민추모위원회는 범국민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6월 16일을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했습니다.

과제를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적 흐름을 형성하는 것,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이 투쟁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쌍용차 투쟁은 단위 작업장의 정리해고 문제만이 아니라, 정리해고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넓혀 줍니다. 범대위는 그 점을 중요하게 보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8월 파업에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투쟁은 8월 민주노총 파업의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인터뷰·정리 유병규·조명지

곳곳에서 쌍용차 연대 투쟁을 심화시키자

쌍용차 투쟁은 확실히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5월 19일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전교조 등 5천여 명은 서울 도심에서 위력적인 집회와 행진을 했다. 5개 종단 대표자들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김재동·변영주 등 연예계 인사들까지 나서 노동자들을 응원했다. 공지영 작가는 곧 쌍용차 문제를 다룬 책도 낸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자, 경찰은 대한문 앞에 차려진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저들은 몸에 휘발유를 끼얹으며 항의한 노동자까지 연행하며 무리수를 뒀다. 운동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대열의 기를 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탄압으로 거두려던 성과를 거머쥐지 못했다. 오히려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분향소 철거 직후 수백 명의 노동자·시민 들은 즉각 항의 집회를 열고 분향소를 재설치했다. 경찰은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김경우 지부장이 바로 석방됐고, 경찰 서장은 재발 방지 약속까지 했다.

이것은 쌍용차 투쟁의 정치적 판돈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의 비극적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여긴다. 또 야만적인 정리해고가 철회되길 원한다.

쌍용차 정리해고와 살인집합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이명박 정부, 이윤 회복에도 모멸치게 해고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마힌드라는 공공의 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며

“순환 무급휴직” 등의 양보안을 다시 꺼내든 것은 우려통하다.

상하이차가 기술유흥과 회계조작으로 회사를 거덜내고 정부가 이를 방조해 생긴 문제를 왜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게다가 쌍용차가 이미 정리해고 이전의 생산량을 회복한 마당에 노동자들을 모두 고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민주당과의 불가피한 경우에 따른 공조조차 원천 거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민주당이 운동의 요구를 낮추라는 압력에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범대위

그동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쌍용차 투쟁을 확대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 속에서 최근 쌍용차 추모대책위원회도 범국민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투쟁을 지속키로 했다.

범대위는 다음 행동으로 6월 16일 ‘범국민행동의 날’을 호소했다. 6월 셋째주 ‘행동 주간’ 중 하루인 13일엔 금속노조 상경 투쟁 대열과 함께하는 집회도 열린다.

이런 행동은 크게 건설돼야 하고,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앞장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범대위가 ‘범국민행동의 날’을 호소한 만큼 금속노조도 13일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16일에도 적극 조합원들을 동참시켜야 한다.

일각에선 ‘각 산별·노조의 투쟁이 준비되고 있는데, 계속 쌍용차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둘은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쌍용차 투쟁이 정



5월 19일 범국민대회 5천여 명이 위력적인 도심 행진으로 쌍용차 투쟁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 준다

치적으로 더 전진한다면, 이명박 정부를 몰아붙이고 전체 정세를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투쟁의 열기도 더해질 수 있다.

예컨대,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서명운동에 조직적으로 동참하고,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벌이고, 대규모로 범국민 행동에 참가한다면 우리 모두 얼마나 힘이 솟겠는가. 노동자들 자신도 이런 연대 투쟁 과정에서 자극을 받고 가능성을 확

인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쌍용차 투쟁의 확대가 민주노총·금속노조 파업에도 자산이 될 것이다.

쌍용차 투쟁이 정치적으로 더 확대·발전하려면, 지역·대학 등 기층에서도 조직과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지난해 희망버스 운동에서 기층의 네트워크들이 주요한 구실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

반갑게도 지금 희망버스 운동에서 주도적 구실을 한 송경동 시인, 김진숙 지도위원 등이 지금 쌍용차 투쟁에 함께하

고 있다. 이 동지들이 범대위와 함께 기존 네트워크 건설에 힘쓰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지역과 대학의 활동가들도 곳곳에서 모임을 만들고, 1백만 서명운동, 집회, 홍보전 등을 진행하며 운동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염원인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따내고, 휘청거리며 발악하는 이명박 정부의 숨통을 완전히 조여 버리자.

조명지

현대차 투쟁

폭력과 이간질에 맞서 2주 연속 특근을 거부하다

금속노조 현대차 정규직지부가 5월 19~20일 이틀간 특근 거부로 1천5백 80억 원의 생산 차질을 준 데 이어, 5월 26~28일 전 공장(울산, 아산, 전주)에서 또다시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차 사측이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 간부를 폭행한 것에 항의하는 것이다.

현재 사측은 정규직지부가 요구한 공장장의 사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의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와 고소·고발로 응답했다.

현대차 부사장 윤갑한은 뻔뻔스럽게도 폭력 사태의 책임을 비정규직 해고자들에게 떠넘기며 “현 사태로 가장 큰 해

락을 입는 것은 ‘하청 해고자’들”이라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을 ‘갈라치기’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적반하장격으로 폭력의 피해자인 정규직지부 김홍규 수석부지부장과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 등 12명을 고소·고발했다.

노동자들이 특근을 거부하며 투쟁에 나서자, 이를 억누르려고 우파 언론의 지원을 받아 “진실 공방” 운운하며 폭력 사태를 몰타기했다.

불법과 폭력

그러나 진실은 사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을 해치려고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폭력 사태 전날 원·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의 봉쇄를 뚫고 공장 안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측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정규직 활동가 4명, 비정규직 활동가 16명을 고소·고발했다.

그리고는 5월 17일 경비대를 동원해 불법파견 특별교섭 참석을 위해 공장에 들어가려던 박현제 지회장과 비정규직 지회 집행부를 막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정규직지부 간부도 폭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다섯 명이 부상을 입었고, 정규직지부 김홍규 수석부지부장은 입원 중이다.

그러나 이런 사측의 공격은 오히려 투

쟁의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정규직지부가 6년 만에 전 공장 특근 거부 투쟁을 벌인 것을 보라.

이번 특근 거부 투쟁은 원·하청 공동 투쟁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입증해 보였다. 그리고 “3년 무분규”였던 현대차 투쟁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이제 5월 26일부터 시작하는 특근 거부 투쟁이 중요하다. 이것은 사측의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과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는 통렬한 반박이고, 이미 기싸움이 시작된 상황에서 노조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현대차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매우 중요한 투쟁

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측의 도발로 예상보다 이르게 투쟁이 시작됐다. 현대차 정규직지부는 현재 벌어지는 투쟁의 기운을 5월 31일 2012년 투쟁 출정식으로 연결시키려 한다.

본격적인 투쟁의 전조전에서 승리한다면, 노동자들의 염원인 주간연속 2교대제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정취에 큰 자신감을 보낼 것이다. 한국 노조운동의 핵심 작업장 중 하나인 현대차에서 2주 연속 특근 거부 투쟁이 벌어진다면, 다른 부문 노동자 투쟁에도 힘이 될 것이다.

지금 현대차에서 벌어지는 투쟁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

김기선 노동자연대 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노동해방실천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통합진보당 서버 강탈에 이어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활동가 네 명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마녀사냥을 지속할 것이다.

해방연대는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족했고, 쌍용차 투쟁을 비롯한 노동자 운동에 적극 연대해 왔다.

이번에 체포된 최재풍 동지는 서울시가 6월 1일 복직시키기로 결정한 서울시

하청 해고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이고, 이태하 동지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조합원이다.

공안당국은 해방연대의 반자본주의 주장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주장은 아주 정당하다. 또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누구나 사회주의를 주장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공안당국은 아비하게도 이적단체 구성죄의 공소시효(7년)를 불과 20여 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서둘러 해방연대를 표적 탄압했다.

공안당국은 ‘국가 변란 선전·선동’,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씌우려 한다. 그러나 소규모 단체로 토론과 선전 위주로 활동해 온 해방연대가 국가 변란을 일으킬 거라며 잡아 가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무장 봉기’, ‘자본주의 국가 파괴’ 등을 말한 바가 없는데도 무조건 덮어 씌우는 식이다.

마녀사냥

게다가 해방연대는 “노동자 민중을 ... 착취·억압하는 스탈린주의적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단체다. 북한의 3대 세습과

연평도 포격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해방연대를 공격한 것은 지금의 ‘종북주의 마녀사냥’이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 준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북한에 우호적인 견해를 단속·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체제와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탄압하는 것에 있음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우파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최재풍 씨를 복직시키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박원

순 시장 자신이 《국가보안법 연구》를 출판해 보안법 폐지를 선구적으로 주장한 바 있지 않은가. 부당해고에 맞서 13년의 긴 세월을 견디며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최재풍 동지는 꼭 복직돼야 한다.

연행 직후 긴급하게 열린 해방연대 탄압 규탄 집회에 50여 명이나 참가한 것은 많은 진보 활동가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폭넓은 방어를 받기 어려운 소규모 단체와 개인들 위주로 공격하며 마녀사냥을 확대하려는 정권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최미진

유로존 위기 원인과의 대안 Q&A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지배자들은 유로존의 미래와 그리스의 경제 위기 때문에 곤경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그리스가 긴축안을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분열해 있다.

이들은 만약 그리스가 다퐁트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를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너무 많은 정부 부채가 문제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

일부 국가들이 자기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했고 이 국가들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부채 증가의 진정한 원인을 무시한다.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은행들과 투자자들은 값싼 신용을 유로존의 '주변' 국가들에게 쏟아 부었다.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은 실재하지 않았던 돈으로 지출을 장려해 이윤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이 값싼 신용은 이윤을 뽑아내고 세금을 회피하는 데만 전문가인 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줬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나라들의 부채가 늘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미국의 빈민들에게 대출한 '서브프라임' 대출이 그 가치를 잃었다. 점점 더 많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됐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행들은 놀라서 대출을 중단했고 정부들은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수천조 원을 썼다. 이것이 잠시 붕괴를 막았다. 하지만 문제를 은행들에서 정부들로 옮겼을 뿐이다. 그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제는 더 강력한 유럽 경제들이 취약한

경제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심지어 독일 정부나 IMF도 유로존 국가들의 모든 부채를 청산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지배자들은 이 과정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들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정부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스스로 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두 해 동안 15번 이상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각 나라에서 긴축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쫓겨나고 있다.

왜 그리스는 이토록 심각한 위기에 빠졌나?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부채가 무분별한 지출과 낭비를 일삼는 생활방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진실은 그리스 바깥에서 그리스가 부채를 얻도록 장려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엄청난 자금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유로존의 주변국가들로 쏟아져 들어왔다.

투자자들은 정부채권을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해 구입했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을 판매해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사실 차용증서를 통해 마련된 부채였다. 2007년 '신용경색' 이후, 투자자들은 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 정부들은 채권을 통해 자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부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돈이 그리스 같은 빈국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모든 정부들은 은행들에 빚을 지고 있

다. 정부들은 은행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것은 사실 차용증서다. 보통 10년의 만기를 정한 뒤 정부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채권을 다시 구입하겠다고 약속한다. 다른 정부들로부터 국제금융을 받은 정부들은 게다가 막대한 금액의 돈을 다른 정부에게 빚 지고 있다.

이른바 '트로이카'가 이러한 국제금을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2010년 1백60조 원이 넘는 국제금을 트로이카에 빚 지고 있다. 2011년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각각 1백25조 원 이상의 대출이 지원됐다. 유럽 지배자들은 이런 대출을 마치 경제적 혼돈에서 이들 나라의 민중을 구출하기 위한 친절한 행동인 것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이 국제금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그리스를 '구제'했다고 말한다. 진실은 그리스 바깥에서 그리스가 부채를 얻도록 장려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엄청난 자금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유로존의 주변국가들로 쏟아져 들어왔다.

투자자들은 정부채권을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해 구입했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을 판매해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사실 차용증서를 통해 마련된 부채였다. 2007년 '신용경색' 이후, 투자자들은 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 정부들은 채권을 통해 자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부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돈이 그리스 같은 빈국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독일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독일은 유로존에서 가장 커다란 경제로 독일 정부의 지지 없이는 국제금융은 불가능하다. 많은 그리스 사람들은 트로이카의 긴축 강요를 나치 독일의 그리스 점령에 비유한다. 하지만 독일이 위기로 부터 이익을 얻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생각은 절반만 옳다. 독일 지배자들도 유로존의 붕괴로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독일 지배자들은 '무책임한' 이웃 나라들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 호황은 나머지 유로존 나라들에서의 높은 지출에 의존해 왔다. 독일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 중 하나다. 독일 수출의 60퍼센트 정도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이다. 1999년 유로화 도입은 독일에게 엄청난 호황을 가져다 줬다. 독일인들이 주변 유로존 나라들에게 돈을 보내고 이 나라들은 그 돈으로 독일 상품들을 수입했다.

독일의 호황은 또한 독일 정부의 '아젠다2010'이라는 노동자들의 임금, 권리, 노동조건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리스와 독일 사장들은 그리스와 독일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제 사장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

트로이카는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국제금융을 집행하는 국제 조직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IMF가 이 조직들이다.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의 유럽재정안정기금은 유럽의 정부들, 특히 독일 정부로부터 기금을 걷은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IMF에 기금을 대고 있다.

IMF는 위기에 처한 나라들에 자금을 빌려 주고 대신 긴축정책과 민영화들을 요구하는 분명한 정통을 가지고 있다. IMF는 이 과정을 '구조조정'이라고 부른다. IMF에 의해 강요된 개혁들은 개발도상국들에서 파괴적인 대참사를 불러왔다.

IMF의 정책은 1980년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10년'을 만들고 1990년대 동남아시아 금융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핵심 구실을 했다. 트로이카는 지금 관리들을 채무국들에 보내 정부 지출 삭감을 감독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의 구실은?

신용평가기관은 부채의 위험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기관이다. 사실 이 기관들은 사기꾼들이다. 채권을 발행하려면 신용평가기관에 돈을 지급하고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 기관들은 부유한 고객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이 가진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은 평가기관들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자들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용평가기관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또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이 부정적 전망을 내놓든 긍정적 전망을 내놓든, 정치인들은 '더 많은 긴축을 하라는 신호라고 해석하며 공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은행과 부자들을 살리기 위한 유로존의 긴축안을 거부하고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

시리자의 대표 치프라스도 "그리스는 공무원 봉급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있다"며 "대외채무 상환을 중단하면 국방비 삭감, 낭비·부패 척결, 부유층 세금포탈 방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그리스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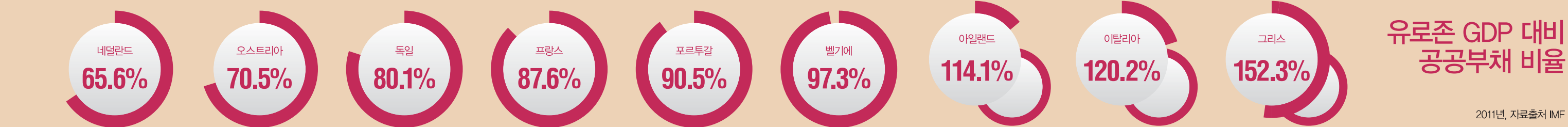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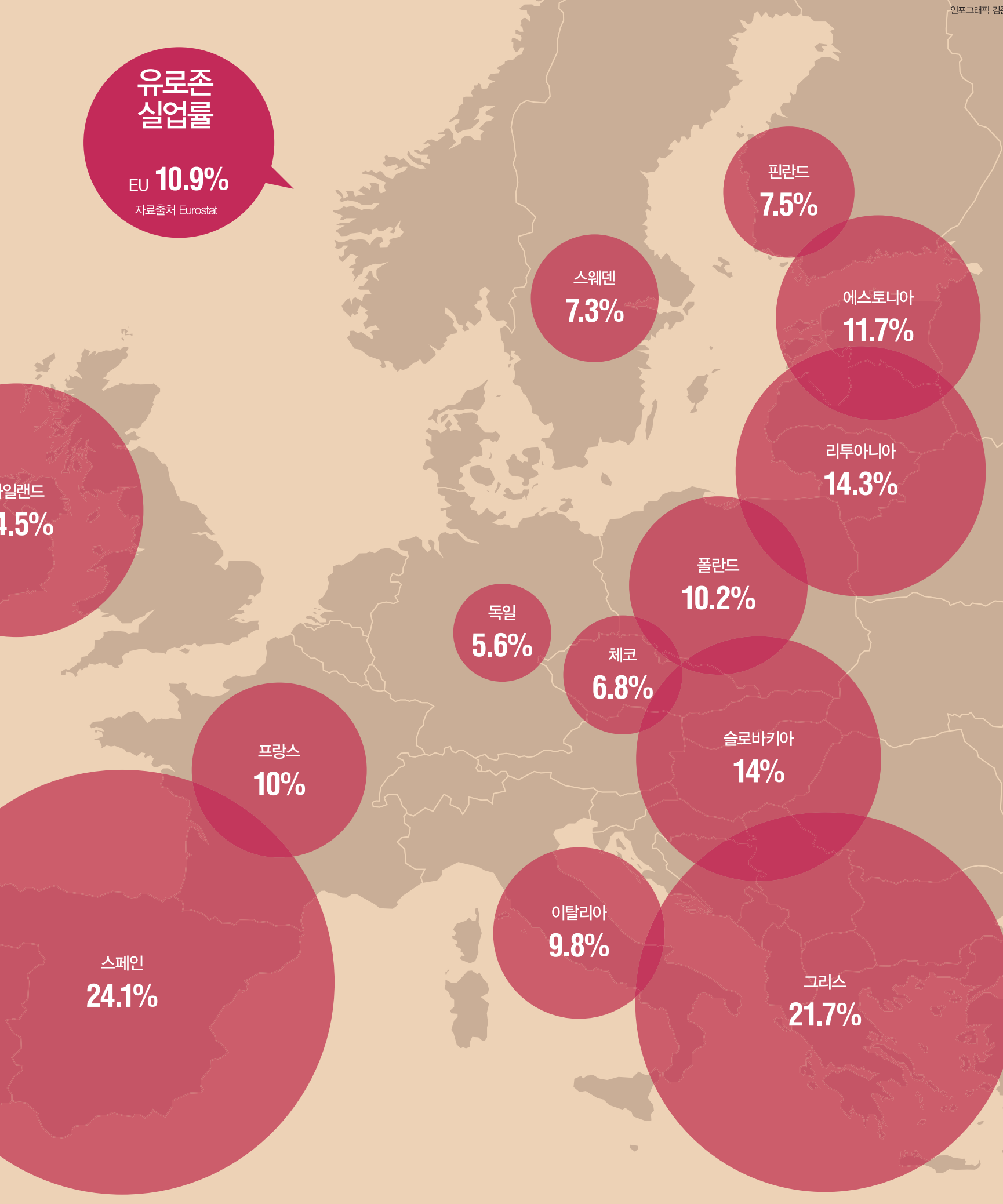
그리스가 긴축안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면 유로존은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것이고 국가는 디폴트에 빠질 것이다. 자본도피가 일어나 은행도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민중을 위한 디폴트는 은행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밀접히 연결돼야 한다. 은행 노동자들은 부자들이 자본을 해외로 빼돌려 경제를 망치는 것을 막을 힘이 있다. 은행 노동자들은 주택 담보 대출 비용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을 빼앗기는 것을 막을 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뜻하지만 민중이 그것을 애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유로존 탈퇴가 의미하는 진실은 탐욕스런 유럽 지배자들이 강요하는 긴축을 끝내는 것이다.

민중을 위한 디폴트(채무 불이행)와 반자본주의적 유로존 이탈은 유로존의 국제적 연대를 뜻할 것이다.



2011년, 자료출처 IMF

그리스 민중은 어디로 전진하고 있는가?

파노스 가르나스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유로존 이탈이 무엇을 뜻할 것인가?

그리스의 보수 신민당과 사회당은 유로존 탈퇴는 재앙이 될 거라 말한다. 하지만 유로존 탈퇴가 의미하는 진실은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강요하고 있는 긴축을 끝내는 것이다.

유로존 탈퇴가 부채를 취소하고 은행을 노동자위원회 통제 아래 국유화하는 반자본주의 강령의 한 부분으로 실현된다면 이 약속을 끝낼 수 있다.

이것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달려있다.

유로존 탈퇴에 의해 탈퇴가 강요된다면 가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좌파가 조직한 민중이 하는 디폴트(채무불이행)와 유로존 이탈은 은행들이 대가를 치

르도록 하고 모든 유럽의 노동자들에게 길을 보여 줄 것이다.

그리스 과도 정부는 뭐하고 있나?

그들의 유일한 권한은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들은 정치 위기를 예상하며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 한 것이다. 전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됐다. 경찰총장이 내무부 장관이 됐다. 파판드레우와 파파데모스 전 총리 시절 경제보좌관이 재무부장관이 됐다. 총리는 법관이다. 과도 정부에는 좌파 성향 인사들도 있다. 하지만 내각 전체의 모습은 앞으로 있을 투쟁에 적대적일 것이다.

모든 관성이 6월 17일에 집중되고 있지만 지난주 많은 파업들이 벌어졌다. 국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도입된 새로운 법안이다 시금 임금 삭감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금세벽당에 대한 지지는 무엇을 반영하나?

이 신나치 단체가 선거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수백만 명에게 충격이었다. 이 성공은 부분적으로 위로부터 조직된 것이었다. 선거 분석을 보면 경찰 중 거의 절반이 이 나치정당에 투표했다. 하지만 주류 정치인들을 벌주기 위해 그들에게 투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위기로 망한 소점포 주인들의 19퍼센트가 경제보좌관이 재무부장관이 됐다. 총리는 법관이다. 과도 정부에는 좌파 성향 인사들도 있다. 하지만 내각 전체의 모습은 앞으로 있을 투쟁에 적대적일 것이다.

모든 관성이 6월 17일에 집중되고 있지만 지난주 많은 파업들이 벌어졌다. 국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도입된 새로운 법안이다 시금 임금 삭감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르시아와 시리자의 투사들은 수많은 투쟁, 파업, 광장 정거장에서 함께 활동했다.

안타르시아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 동맹으로 2008년 아테네에서 경찰이 15살 학생을 사살한 뒤 발생한 저항으로부터 건설됐다. 안타르시아에는 군사독재에 맞선 1973년 산업대학 봉기 때의 혁명적 좌파부터 1989년 공산당이 그리스 의 보수 정당들과 정부를 구성한 것에 반해 탈당한 신좌파, 학생과 노동조합 투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SEK는 무엇인가?

SEK는 사회주의노동자당으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그리스 지파 조직이다. 우리는 1972년 군사독재 시절 작은 단체로 시작했고 학생 투쟁과 노동자 투쟁에 관련을 맺으며 성장했다. 항상

반자본주의를 지향해 온 우리는 안타르시아 형성에서 핵심 구실을 했다.

그리스 개혁주의는 어떤 모습을 띠는가?

시리자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을 개혁해서 긴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좌파 정부가 유로존 탈퇴 같은 일방적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협상을 통해 긴축을 중단하려고 한다. 그들은 재정 흑자가 채권자들과의 협상에서 그리스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상 긴축 중단이라는 약속을 독일 정부와 은행들이 합의할 때까지 연기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르시아는 강력한 반자본주의 좌파가 필요하며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4호 / 번역 최홍찬

그리스 민중에 연대를 표한 독일 시위대

적어도 2만 5천 명이 5월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행진을 벌였다. 이날 시위는 16일부터 시작된 "블로쿠파이(봉쇄하다와 점거하다의 합성어) 운동의 일부로 벌어졌다. 블로쿠파이는 점거하라 운동의 한 갈래이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날 시위대가 누빈 프랑크푸르트 중심가는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방크푸르트(은행과 프랑크푸르트의 합성어)라고 부를 만큼 유럽의 핵심 금융가다.

좌파당이 시위와 관련한 여러 행

사의 조직에 관여했고 그 가운데는 국제 연사들을 초대할 집회도 있었다.

이날 시위는 독일 정부가 그리스 민중에게 강요하는 가혹한 긴축 정책을 많은 독일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 줬다. 그 대신에 시위 참가자들은 "경제 위기는 우리 탓이 아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라" 같은 구호들을 외쳤다. 연단에 오른 연사들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 사람이다" 하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3호 / 번역 정홍수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떠오르는 유럽의 급진좌파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컬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파산했다. 최근 스페인에서 벌어진 금융 위기는 그러한 파산을 문자 그대로 보여 줬다. 유로존 해체가 계속될 경우 유로존의 위기를 구제할 돈은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이 파산은 도덕적·지적 파산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점이아말로 최근 선거들의 가장 큰 교훈이다.

최근 선거들에는 되풀이되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다. 중도파가 선거에서 거꾸 패배하고 있다. 이들은 앙겔라 메르켈이 유럽 연합의 제도적 구조로 확립하고자 한 긴축 정책을 지지했고 지금 그 역풍을 맞고 있다. 좌파와 우파로의 양극화도 더욱 심해졌다.

매우 소름끼치게도 여러 곳에서 극우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스 총선에서 7퍼센트를 득표한 황금세벽당은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은 유럽 스타일의 파시스트가 아니다. 이들은 길거리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강경한 나치다. 그러나 급진 좌파도 성장하고 있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다. 그리스의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 아말로 가장 분명한 사례다. 시리자는 이번 그리스 총선에서 16.8퍼센트를 득표했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6월에 재선거를 치를 경우 시리자는 25퍼센트 이상을 득표할 거라고 한다. 게다가 지난달 프랑스 대선에서는 장뤼크 멜랑송이 11.01퍼센트를 득표했다. 다른 사례들도 더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신재정협약학에 따른 긴축 정책의 부담 탓에 최근 붕괴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 받고 있는 것은 갑작스레 집권 연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우파 포퓰리스트 게르트 빌더스가 아니라, 급진 좌파인 사회당이다.

이렇듯 떠오르고 있는 좌파의 정치는 무엇인가? 조금 과하게 단순화하자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런저런 부류의 좌파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시리자에 극좌 그룹들도 포함돼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핵심 세력인 시나스피스 모스는 그리스 공산주의 운동에서 좀더 타협적이고 친서방적인 분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분리

멜랑송은 1997~2002년까지 집권한 재앙적인 좌파 연정에서 장관을 지낸 뒤 프랑스 사회당 내의 좌파를 이끌고서 당을 뛰쳐나온 인물이다. 더욱이 그가 속한 좌파전선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프랑스 공산당이고, 그 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당 공무리만 쫓아다녔다. 프랑스 대선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혁명적 좌파들이 거둔 저조한 성적이다.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 후보였던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2002년과 2007년 대선에서 공산당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노동자 투쟁(LO)도 아를레트 라기예가 대선 후보로 나선 시절에는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브장스노가 속한 반자본주의신당(NPA) 후보와 노동자투쟁의 후보 모두 멜랑송에 가려서 빛을 잃었다.

좌파 개혁주의 정당들이 긴축 반대에 앞장서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좌파 개혁주의자들은 주류 사회민주주의가 우경화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꾸고 있다. 영국 노동당과 프랑스 사회당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탓에 지금은 "사회자유주의자들"로 불리고 있다.

멜랑송, 시리자의 지도자인 알렉스 치프라스, 영국의 조지 갤러웨이 같은 인물들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유권자들의 분노를 친숙한 개혁주의 언어로 또렷하게 표현함으로써 표를 얻고 있다. 에드 밀라반드와 프랑스어 올랑드도 당의 목소리를 바꿔서 이러한 분노에 호응하려 들지만 사회자유주의와 단절하지 않으려 하므로 자기 원인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고 있다.

아무튼 긴축에 맞선 저항 덕분에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든저 그보다 더 급진적인 경쟁자들이든저 둘 가운데 하나가 집권할 테지만, 양쪽 모두 독일 정부와 그리고 금융 시장과 협조하라는 커다란 압력에 놓일 것이다. 그리스 총선이 끝난 뒤 치프라스는 "오만적인" 긴축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하는 멋진 연설을 했다. 그러나 그 뒤 곧바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과 의회 의장 앞으로 훨씬 덜 공격적인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러한 모순적 성격은 모든 개혁주의에 고유한 것이다. 개혁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표현하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저항이 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제약하려 든다. 그러나 그러한 모순이아말로 혁명적 좌파를 건설해야 할 뚜렷한 이유이기도 하다. 혁명적 좌파는 지금 이처럼 유럽을 휩쓸고 있는 거대한 운동의 일부여야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독자성도 유지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3호 / 번역 정홍수

스페인으로 전염되는 위기와 반란

선 러덕

스페인이 유로존 몰락 도미노의 다음 대상이 될 것인가? 최근 스페인에서는 가장 큰 은행 가운데 하나인 방키아에서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 조짐이 나타나는 등 시장이 점점 혼돈에 빠지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강도 높은 삭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노동자 대중은 대량 실업으로 고통받았다.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

스페인 경제는 최근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상태다. 스페인이 부채도 깊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지불하지 않으면 구제금융을 받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스페인은 유럽연합이 정한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게다가 스페인 은행들은 악성 채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게다가 5월 18일에 세계 증시는 지난해 11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스에 크게 데인 은행들은 스페인도 진창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금융 분석가인 니콜라스 스피로르는 스페인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붕괴라는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항도 늘고 있다. 5월 22일 교사·학생·학부모 수십만 명이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에 맞서서 스페인 전역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분노한 사람들’ 운동도 노동자, 실업자, 학생을 단결시키고 있다. 분노한 사람들 운동은 건축 정책 폐기와 실업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분노한 사람들 운동을 주도하는 급진적 활동가 다수는 자본주의와 지금의 사회 운영 방식에 매우 비판적이다. 그들은 수백만 명이 참가한 시위를 조직했다.

이 운동에 대한 지지도 매우 크다. 이번 달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78퍼센트가 건축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것이 “옳다”고 답했다.

그리스 사태 이후, 스페인만 은행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나라들이 차례차례 표적이 되고 있다.

유로존 전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민중 대 은행 사이에 전선이 있다.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이야말로 승리의 열쇠일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304호 / 번역 정종수



사진 출처 Alejandro Garcia Monro (물리키)

5월 22일 스페인 파업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온갖 복지를 축소하는 지배자들에게 대한 분노와 저항이 커지고 있다.

격변을 앞둔 프랑스

찰리 김버

프랑스 대선 결과는 중대한 투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사르코지에 대한 대중의 거부는 분명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는 파시스트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었다.

르펜의 주요 정책은 반이민, 반무슬림 인종 차별주의다. 수년간 주요 정당들은 르펜이 이 정점들을 주도하도록 했고 르펜 정책의 핵심 요소들을 수용해 왔다. 이것이 르펜[의 세력]을 강화시켰다.

결선을 앞두고 사르코지는 “나는 국민전선에 투표한 이들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올랑드의 선거책임자도 “우리는 단호하게 불법 이민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르펜만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동자들과 청년들을 고무한 장뤼크 멜랑송도 빛났다. 멜랑송은 좌파당과 공산당 연합인 좌파전선 후보였다.

대중 집회들을 통해 민중은 그의 사상들에 대한 공세적 비판, ‘시민혁명’ 호소, 경제·생태·사회 정의의 위한 제6공화국 주장 등에 호응했다. 그의 공약은 최저임금 20퍼센트 인상, 30만 파운드(약 5억 5천만 원) 이상 소득 자들에 대한 1백 퍼센트 과세, 주 35시간 노동제 즉시 복원, 60세 정년제 복원,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국유화 등이었다. 그는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해야 하고, 미국이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멜랑송은 사회당의 올랑드도 은행가들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요하게도 멜랑송은 르펜을 비판하고 이슬람혐오증을 비난했다. “중요의 정당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종교나 피부색에 따라 분열하지 마십시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니킵[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 금지 법안이 공산당원 앙드레 게링에 의해 제안된 점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변화다.

멜랑송의 부상

좌파전선, 반자본주의신당(NPA), 노동자 투쟁당(LO)의 득표율을 합치면 12.8퍼센트인데, 이것은 사회당 왼쪽에 있던 주요 세력들이 2007년에 획득한 7.34퍼센트에 비교하면 상당히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NPA의 득표율이 지난번 4.08퍼센트에서 1.15퍼센트로 하락한 것은 아쉽다. 이것은 NPA 내부의 위기와 NPA가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연결시키지 못한 게

반영된 것이다.

올랑드의 새 정부 하에서 일부 멜랑송 지지자들이 관직의 유혹에 빠지게 될지, 혹은 6월의 총선을 두고 어떤 연합이 결성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멜랑송의 선거운동이 의석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여당인] 사회당에 압력을 넣는 데만 충실해서는 위험할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다.

올랑드의 정책은 영국 노동당보다 좌파적이었다. 그는 1백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퍼센트 과세를 주장했다. 올랑드는 선거 과정에서 약간 더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일부 금융가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올랑드는 엄청난 삭감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8백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 적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1981년에도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하고, 1년간 일부 개혁들이 있었다. 그러자 사장들이 저항했고, 이 때문에 개혁이 중단됐다. 미테랑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임금을 동결했다. 그 결과 쓰디쓴 환멸이 나타났고 이것이 국민전선 확대의 기반이 됐다.

지금 사회당의 새 정부는 품위를 유지할 1년이라는 시간이 없다. 그때에 비해 지금의 위기는 너무 깊고 사장들과 은행가들은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는 급격하게 양극화하고 있다. 좌파들은 작업장과 거리에서 저항을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슬람혐오자들과 파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거짓 선동에 체계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주류 언론들은 항상 르펜과 관련해 두 잘못된 입장 사이를 오간다. 파시즘은 별로 영향력이 없다거나 파시즘이 곧 권력을 획득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 모두 사실이 아니다.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전선에 투표한 사람들의 수도 커졌다. 하지만 국민전선은 이전에 표를 많이 획득했던 주요 도시들과 노동자 지구들에서 지지율이 크게 줄었다.

좌파전선은 파리, 리옹, 릴, 보르도, 툴루즈, 몽펠리에, 낭시, 낭트 등 주요 도시에서 국민전선에 앞섰다.

인종차별주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경제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저항을 건설할 때 르펜을 패배시키고 그녀의 지지자 일부를 획득할 수 있는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5월호 / 번역 최용찬

화물연대 이봉주 서울경기지부장

“차근차근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부산역 집회가 보여 줬듯이, 조합원들의 분노가 큼니다. 80.6퍼센트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도 결의했어요.

운송로 인상, 경유가 인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우리의 요구예요. 이는 화물연대 설립 때부터 주장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가 파업하면 잠깐 들어주는 척 하다가, 파업이 끝나면 2~3개월도 안돼 약속을 어겨 왔습니다.

예컨대, 표준운임제 도입은 이미 정부가 2008년에 약속했던 거예요. 총리실 훈령으로 2009년까지 법제화하겠다고도 발표한 바 있죠. 그러나 약속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오히려 2008년 이후 운임료가 25퍼센트나 깎였습니다.

그동안 파업을 하면서 학습한 게 있습

니다. 운임료를 올려 봐야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표준운임제가 필요합니다.

기름값도 대폭 내려야 해요. 노동기본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해 보니, 조합원 30퍼센트가 신용 불량자고, 나머지 70퍼센트도 상당한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빚을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의 분노가 끓고 있는 것이고, 올해는 꼭 우리의 요구를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큰 겁니다.

비조합원들도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고생하는데 뭐라도 먹으면서 하라’며 지원금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핑 돌아요. 어

떤 심정일지 알기 때문이지요.

정부는 우리의 투쟁에 대비해 준비해 왔습니다. 군인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상하차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주로 엘지, 삼성 같은 대기업의 화물 운송을 할 겁니다.

우리도 이에 맞서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정부는 아직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6월 초에 구성되겠지만, 우리가 파업하지 않고 있으면 과연 정치권에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파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엔 파업할 땐 항만 봉쇄도 필요할 거예요.

물론, 봉쇄 투쟁을 하면 탄압도 심하



사진 출처 화물연대

까 부담이 크기는 하죠. 그러나 연대 대오가 와 준다면 우리도 힘이 날 겁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더는 물러날 곳도 없고 더는 짓밟힐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노동 총파업의 선두에서 투쟁한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선 투쟁이 성공해야 그 다음 투쟁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투쟁은 화물연대만의 투쟁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가 헛구호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해요.

저들은 우리의 정당성을 깎아 내리고 악선동을 할 게 뻔합니다. 이런 공격에 함께 맞서 주세요.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알려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김진석

저들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

이 글은 고(故) 크리스 하먼이 1996년에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에 기고한 글을 일부 축약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부정 선거 사건과 그것을 이용한 우파의 마녀사냥이 이어지는 지금, 도덕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제시한다.

크리스 하먼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와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저널〉의 편집자로 활동했다.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두 해 전 강연을 위해 이집트에 머무르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로 살아온 그는 《민중의 세계사》를 비롯해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최근 그의 유작인 《좁은 자본주의》(책갈피)가 번역 출간됐다.

이 글의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http://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다.

주류 정치인들과 언론이 수시로 일으키는 도덕론 물결은 많은 사람들을 구역질나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돈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주고, 국민자들을 길거리에 방치하고, 항상 거짓말을 일삼고, 의원들의 부패를 감추어 온 정부가 도덕을 운운하곤 한다. 이런 정부가 뻔뻔스럽게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도덕질하지 말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거짓말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사회를 돌보는 ‘시민의식’을 가르치라고 주문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언론과 주류 정치가들이 권위주의적 억압을 강화하려고 도덕이라는 말을 사용할뿐더러, 그들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고 주장한다. 언론과 주류 정치인들의 행동이 사회를 괴롭히는 악을 만들어 낸다.

일부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항의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는 항상 추상적 도덕에 관해 말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는가?”

분명 그들은 추상적 도덕에 관해 말하는 것을 비난했고, 그것은 옳았다. 도덕 규범들은 역사와 사회 바깥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나쁜’ 행동이 다른 사회에서는 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도덕 규범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살인은 각료회의나 군대 최고 사령부 회의에서 결정돼 군복 입은 남녀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닐 때에야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

추상적인 도덕 — “모든 살인은 잘못이다.” “모든 폭력은 잘못이다” — 을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선을 수용하든지(우익의 도덕 주창자들처럼), 아니면 기존 사회의 악들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손을 떼게 되든지(왜냐하면 그런 투쟁은 ‘비도덕적’ 수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로 끝난다.

추상적

그러나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어떤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파업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의무, 투쟁에서 당신의 동지들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의무, 연대를 보여 줘야 할 의무, 인종적 또는 종교적 소수파를 희생양 삼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해야 할 의무가 그것이다.

사람들은 핵무기로 이 세계를 파괴하려는 위협,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조장, 가스실과 나치 수용소 등이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희망버스 참가자와 연대의 인사를 나누는 한진 노동자 우리의 도덕적 잣대는 이런 계급적 단결과 협동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 적용돼야 한다.

그들의 도덕 규범들은, 그들이 이 체제를 전복하려 하지 않고 이 체제에 봉사하려 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추상적인 도덕론을 거부하지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규범을 제공한다.

잘못됐다고 여긴다.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날 사회주의자가 될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1840년대 중반에 마르크스가 처음 사회주의자가 된 것도 바로 그런 ‘도덕적’ 관심 때문이었다. 그의 출발점은 진정한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지, 즉 “인간이 천대받고, 버림받고, 경멸받는 노예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모든 조건을 뒤엎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런 ‘자유’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단순히 절대주의 국가나 제도 종교 등을 없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는 시장에서 상품을 팔고 사는 것에 기초한 관계를 제외하면, 사람들 사이의 모든 유대를 파괴한다.

마르크스 이전의 철학자인 헤겔은 순전히 자유주의적인 접근법이 가진 약점을 간파한 바 있다. 부르주아적 자유는 인간이 시장을 통해 원자화된 방식으로 상호 관계를 갖게 한다. 개인의 자유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에 의해 끊임없이 침식당한다. 따라서 아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

만년의 헤겔은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제공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에는 중간계급 자유주의가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요소가 국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헤겔의 통찰을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국가는 진정한 공동체적 유대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원자화된 시장 조건을 결코 무력화하지 못한다.

게다가 국가는 특정한 사회 집단이 통제한다. 국가 권력은 사람들을 더한층 억압하는 데, 즉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외를 심화하는 데 봉사한다.

계급이 없었던 사회에서는 도덕 용어를 — 선량함, 정직, 정숙 — 이, 협력적인 노동과 사회 생활에서 혜택을 얻기 위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단 계급사회가 등장하자, 각각의 계급은 그 용어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게 된다.

지배계급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다른 계급들에게 강요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선량함’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수용하는 것을 뜻하게 됐고, ‘정직’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하게 됐으며, ‘정숙’은 개별 가족으로 개인적 관계들을 가두는 것을 뜻하게 됐다. 국가는 권력을 이용해서 피지배계급에게 지배계급이 부과한 도덕 규범들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것과 자유로운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것 사이의 연결 고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 지배적인 도덕은 한편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련의 규범들이 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인간적인 일부 속성들에 죄의식을 갖게 된다.

사회적 협동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도덕 개념이 한번 성취한 적이 있는 목표 —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협동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도록 한다는 — 를 망각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가 인간 관계를 훼손하면 할수록, 그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더 중요해진다.

바로 그 때문에 청년 마르크스는 인간 해방이 오로지 새로운 협동적 사회 질서

의 전망을 제기하며, 시장 사회 전체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오로지 “모든 계급을 해체할 계급, 그들의 고통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회계급”만이 이 세력을 이룰 수 있다. 마르크스가 노동자 계급을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데 꼭 필요한 행위자로 여겼던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마르크스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투쟁 속에서 ‘도덕론의 언어’는, 지배계급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사용하는 언어라는 점이 너무도 자주 드러났다.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도덕론자들조차 개인적 행위에 관해 도덕적 설교를 하는 것 — “당신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 이상을 할 수 없었다.

그와는 반대로 노동자 계급 투쟁의 모든 진정한 발전은 진정으로 협동적이며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의 가능성을 알려 주는 그런 종류의 가치들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그런 투쟁들은 연대와 상호 지지와 협동적 노력이라는 개념들을 제기한다.

이런 새로운 가치와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이 만들어낸 가치 간의 대조는, 기존 사회를 유지하려 하거나 개인적 출세를 위해 투쟁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마르크스 주의적 비판에 ‘도덕’을 제공해 준다.

마르크스 시대에 자본주의 도덕론을 받아들이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협동적이고 인간적이며 살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부인하는 사회가 영속하는 것을 도왔다. 오늘날 그들은 더욱 나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핵전쟁을 일으키거나 생태환경에 대재앙을 만들 어냄으로써 인간 삶의 토대 자체를 위협하는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들의 도덕 규범들은, 그들이 이 체제를 전복하려 하지 않고 이 체제에 봉사하려 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추상적인 도덕론을 거부하지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규범을 제공한다.

1930년대 중반에 트로츠키가 지적했듯이, “그것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힘을 증대시키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힘을 폐

지하게 한다면”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기존 사회의 도덕론자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단들이 필요할지 모른다. 예컨대, 지배계급의 폭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나, 계급의 적의 면전에서 속임수를 쓰는 일이 그것이다.

반면, 이런 목적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계급에 기반한 비인간적인 사회를 영속하는 데 명백히 일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도덕과는 모순되기 때문에 거부해야 하는 수단들 — 기존 사회의 도덕론자들이 ‘정당하다’고 여기곤 하는 수단들 — 도 있다.

계급사회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허용할 만하며 필수적인 수단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를 결속시키고 억압에 대한 화해할 수 없는 적대감으로 그들의 심장을 채우고 ... 그들 자신의 역사적 사명 의식을 고취하고 용기와 자기 희생 정신을 고취시키는 수단, 오로지 그런 수단 뿐이다.

“정확히 이 점 때문에 모든 수단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나온다. ... 위대한 혁명적 목표는 한 부분의 노동자 계급을 다른 부분의 노동자 계급과 맞서게 하거나 ... 대중 자신과 그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수단과 방법들을 거절한다.”

허용할 수 없는 수단에는 노동자 계급을 무지 속에 방치하는 것,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열시키는 것, 억압자들에 대한 환멸을 소수 집단 희생양 삼기로 돌리는 것, 세계적 계급세력을 약화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요컨대, 노동자 계급이 “보편적 계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칙으로 배제해야 하는 수단은 나치 수용소, 핵무기,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인종적 증오, 포르노그래피, 대중을 속이는 일, 지도자 숭배를 확립하는 것 등이다. 노동자 계급 혁명을 위한 투쟁에는 노동자들이 이런 일들을 무심코 하거나 받아들이도록 부추기는 그 어떤 것에도 맞서는 투쟁이 포함된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3호 (1996년 12월)

곳곳에 불안 요인이 도사린 한국 경제

OECD는 2012년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3.5퍼센트로 하향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3.3퍼센트로 내렸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첫째 이유는 물론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나타난 유로존 위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럽계 자금이 급히 빠져나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면 그리스에 돈을 빌려 준 유럽 은행들이 커다란 손실을 보고, 이는 다시 스페인·포르투갈 같은 위험 국가를 타격할 것이다.

특히 스페인 은행들이 유럽 은행들에 갚아야 할 빚은 4천3백억 유로로 그리스의 다섯 곱절이 넘는다.

따라서 그리스의 디폴트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전 세계 경제에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긴축을 계속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긴축을 하면 경제가 침체하면서 세금이 줄어 재정적자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로존 해법을 두고 전 세계 지배자들의 분열도 심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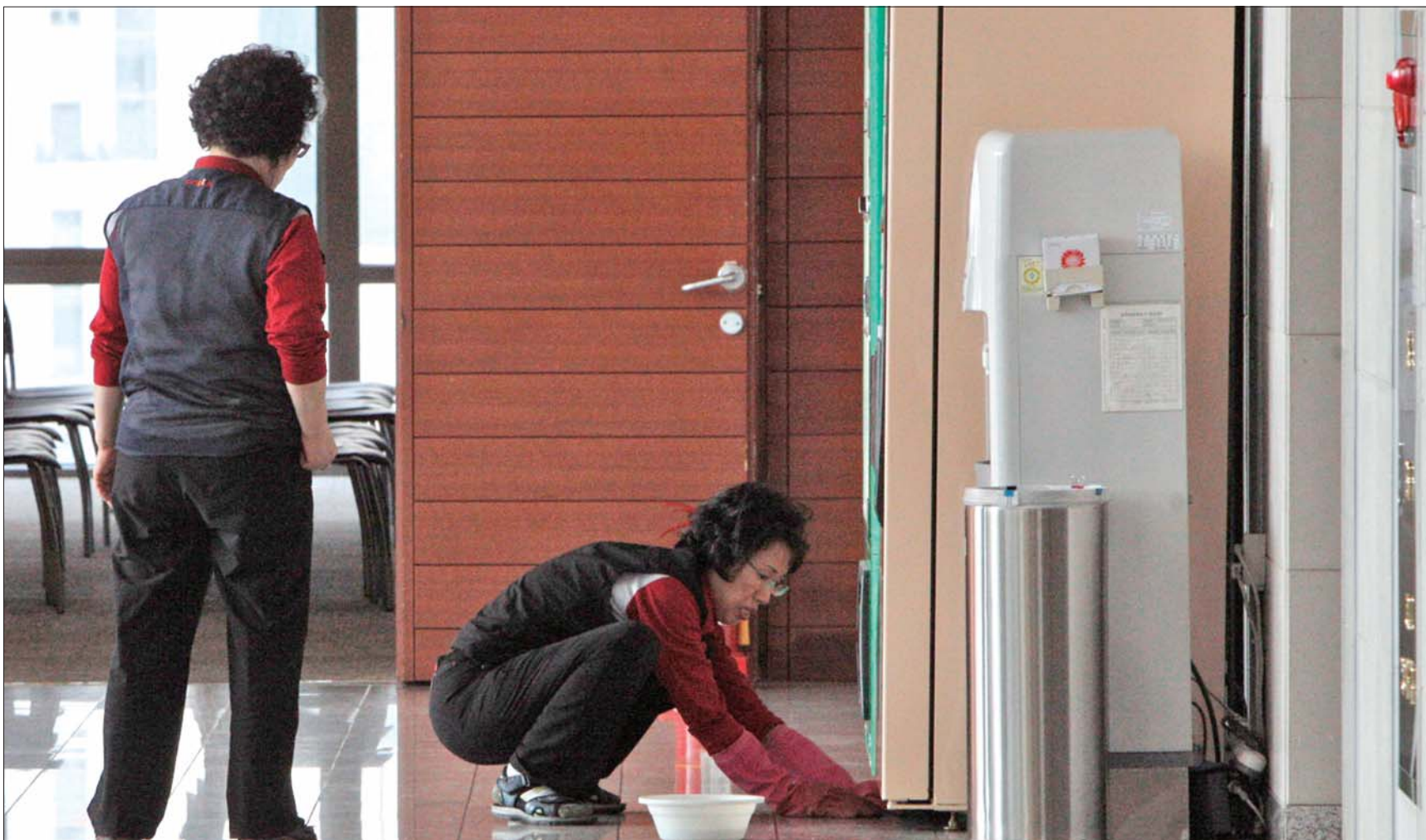
물론 유로존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일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계속될 것이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체다. 최근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하면서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 위기는 중국 경제 침체에서 한 몫하고 있다. 중국의 최대 수출 지역이 바로 유럽연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2008년 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이 약발은 떨어지고 부실채권은 급증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4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어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대외 요인들 때문에 올해 우리 나



5월 1일 노동절에도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됐다.

라의 1사분기 수출 증가율은 3퍼센트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4사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수출 증가율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아 대미 수출은 선방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이를 보여 주는 지표가 바로 미국 실업률이다.

2009년 말 10퍼센트까지 치솟았던 미국 실업률은 올해 3월 말 8.2퍼센트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통계상 실업률이 줄어든 것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아

예 구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미국 실직자는 오히려 5백만 명가량 늘었다.

유로존이나 중국에서 위기가 심화하면 미국 경제도 결코 안전할 수 없고, 한국의 대미 수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높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금융권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가계신용은 9백조 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주택관련 대출과 기업 대출에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금융권 전체에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융권 부실의 위험

을 보여 줬다.

한국 지배자들은 금융 불안정이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 나서는 한편,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일에 나서고 있다.

경총은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핑계로 올해 임금 인상률을 2.9퍼센트 제시했는데, 이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에 세계경제가 일시 회복됐을 때 수출이 크게 늘면서 한국 대기업들은 큰 이익을 거뒀다. 이 때문에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9년 60.9퍼센트에서 2010년 59.2퍼센트로 대폭 떨어졌다.

지배자들은 꼭 필요한 일자리도 저질 일자리로 채우고 있다. 올 3월까지 시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3월에 전취 17만 명이나 늘어났다.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노동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더는 치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올해 정규직 임금 9.3퍼센트, 비정규직 임금은 19.1퍼센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기 시작한 현대·기아차, 화물연대, 쌍용차 투쟁 등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강동훈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⑥

국가와 자본의 관계

올해 초 이명박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증대”를 압박하며 현대·기아차 등의 자본가들과 미묘한 긴장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에는 KTX 민영화 추진할지 말지를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다. 이런 일들을 보면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게 타당한지 물음이 던져진다.

마르크스는 국가가 본질적으로 계급 지배를 위한 기구라고 봤다. 실제로 최근 이 나라 국가는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강도짓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 때 구속된 노동자 수가 같은 기간 이명박 정부 때보다 많은 것에서 보듯(노무현 정부 4년여 동안 9백58명, 이명박 정부는 4백49명)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도 국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보며 일부 사람들은 국가가 단순히 자본가들의 대리인이라고 여긴다.

일부 급진좌파들은 ‘국가는 총자본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자본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면서 국가에 맞선 정치 투쟁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과 연결되기도 한다.

스탈린주의에서 주장한 ‘국가독점자

본주의론’도 국가가 삼성, 현대와 같은 소수 독점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설명한다.

《공산당 선언》의 “현대 국가의 집행기구는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관심사를 다루는 하나의 위원회일 뿐이다”는 구절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서두에서 말한 현실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국가는 단순히 자본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마르크스도 《브뤼메르의 18일》에서 당시 프랑스 보나파르트 국가의 행정력을 “거대한 관료적-군사적 조직, 교묘하고 폭넓은 토대를 지닌 국가 기구, 그리고 50만 명을 헤아리는 실제의 군대와 함께 50만 명의 관료로 이루어진 군대”라고 묘사했다. 이런 ‘국가 기구’는 자본과 구별되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가진다.

실제로 국가는 종종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대립되는 주장을 한다.

최근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자 오바마 정부가 월가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도 국가와 기업 간의 충돌을 보여 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집트의 나세르와 시리아의 바트당은 권력을 잡고는 대자본을 해체하고 국유화했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가와 자본을 단순히 대립시키지도, 동등그리지도 말고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탁월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혁명가였던 고(故) 크리스 하먼이 이런 분석을 발전시켰다.

《좀비 자본주의》에서 크리스 하먼은 “국가와 자본의 관계는 사람들 간의 관계, 즉 대중을 착취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들과 무장 집단을 통제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다” 하고 썼다.

구조적 상호 의존 관계

국가관료와 자본가들은 온갖 연줄로 얽히고설켜 있고 서로 상대방을 이용한다.

“국가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들은 기업이 경쟁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기능을 떠맡는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자본들을 중재해야 하고, 사법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중앙은행을 통해 금융 시스템과 국내 통화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총자본’은 오직 관념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 완전히 다른 정치·행정 시스템의

특별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국가는 또, 국민 대중을 체제 내로 통합하는 메커니즘도 제공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굴복시키는 강압기구(경찰, 보안경찰, 감옥 등)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불만을 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통로로 돌리는 통합 메커니즘(의회 기구, 단체교섭 체계, 개혁주의·보수주의·파시스트 정당들이) 그것이다.

“강압 메커니즘과 통합 메커니즘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축적이 이뤄지는 영역 밖에 존재하는 조직과 지도력에 의존한다. … 따라서 국가는 자본 일반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회집단과 계급을 포섭하려고 제공하는 양보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반드시 나타난다.”(《좀비 자본주의》)

물론 국가의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운영되려 해도 조세 수입이 제대로 들어와야 하고 이를 위해 자본가들이 뽑아내는 잉여가치가 충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자본주의적 축적을 유지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존한다.

국가와 자본들은 싸우는 형제들처럼 잉여가치를 어떻게 분배할지를 둘러싸

고 긴장과 갈등을 벌인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 관계와 정치적·이데올로기적·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착취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호 의존한다.

개혁주의자들은 국가와 자본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며 국가를 활용해 자본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 기구는 본질적으로 착취 체제에 의존하고 있고 계급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를 이용한 자본주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 국가와 자본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추상적으로 봐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이용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와 자본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며 갈등을 벌인다면 이는 아래로부터 투쟁을 자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가 대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을 압박했던 것을 이용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을 통해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정선영



혁명적 조직 건설의 ABC ①

왜 혁명적 조직이 필요한가

〈레프트21〉은 부정의하고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지지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응집력 있는 혁명조직이 필요하다. 이 연재에서는 혁명조직의 필요성과 그 조직 원리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다룬다.

① 왜 혁명적 조직이 필요한가

② 혁명적 조직과 혁명적 신문

③ 민주집중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마르크스가 말했듯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을 통해 가능하다”. 이집트에서 무바라크의 30년 독재를 단 몇 주 만에 끝낸 대중 항쟁과 노동자 투쟁은 사회를 바꿀 힘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 줬다. 지난해 희망버스 투쟁 등 크고 작은 개혁을 이루는 핵심 동력은 바로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이었다.

이렇게 노동계급의 대중 운동이 사회를 바꿀 진정한 힘이라면 혁명조직은 왜 필요할까? 실제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운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혁명조직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노동자들의 의식이 불균등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체제에 순응하는 관념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는 자신이 만난 다섯 명의 노동자를 통해 사회주의 조직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만난 한 노동자는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에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노동자였다. 다른 한편에는 파업에 적대적이고 여성차별,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반동적인 노동자가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노동자는 이 두 노동자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혁명조직은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해 이처럼 동요하는 사람들을 선진 부위로 끌어당겨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구체적인 현실,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적 경험,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민주적 토론과 행동을 통해 이 과제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든 투쟁의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진다. 파업을 벌이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확대할 것인가, 국회 로비와 선거에 더 기댈 것인가?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대학 분과 점거 투쟁을 벌일 것인가, 투쟁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뒤꿈무늬를 좇으며 투쟁을 접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다양한 정치 경향들은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투쟁을 이끌려 한다. 개혁주의자들은 투쟁을 조직하기도 하지만 투쟁이 어느 순간에 이르면 후진 부위의 눈치를 보며 절충하고 타협해 오히려 투쟁하려는 부위의 사기를 꺾는 일을 벌여곤 한다.

2008년 6월 10일 1백만 명이 모인 촛불 시위 이후에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촛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거리의 촛불 투쟁을 더욱 확대시키기를 한사코 거부했고, 이명박의 집요한 탄압과 김빠기에 밀려 촛불은 안타깝게 사그라들고 말았다.

국제 노동자 투쟁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1968년 5월에 프랑스 공산당 관료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드골 정권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반면 혁명조직은 선진 부위의 노동자와 대중을 고무하며 일관되게 투쟁을 전진시키려 한다. 2008년 촛불의 과정에서도 다함께는 촛불 운동이 거리 행진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고, 촛불이 이명박 퇴진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 투쟁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점에서 혁명조직은 무엇보다 실천

을 위한 조직이다. 혁명조직의 구성원은 투쟁을 건설하는 능동적인 활동가여야 한다.

이는 당비를 내고 몇 년에 한 번 열리는 지도부 선거에 투표하는 수동적인 당원들이 대부분인 사회민주주의 정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말만 “혁명, 혁명”을 외치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현실 운동에 뛰어들기를 거부하는 초좌파적인 조직과도 다르다.

혁명조직의 실천은 혁명적 정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레닌이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 없다”고 했던 것처럼 혁명조직에서는 이론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연결돼야 한다.

이런 전통은 이론이 부차화되고 조직이라는 논리가 우선하는 스탈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옛 소련과 같은 사회를 추구하던 각국 스탈린주의 공산당들은 옛 소련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를 어떤 이론보다 우선시 하며 소련의 국경 수비대 구실을 자처했다. 그래서 이론은 행동을 사후 정당화하는 수단인 경우가 많았다.

또 혁명적 정치를 바탕으로 둔다는 말은 전체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이다.

혁명조직은 계급 전체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며 부문주의를 뛰어넘어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단결하도록 돕는다.

레닌은 1905년에 이를 구현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혁명적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에는 ‘혁명적 신문’이 혁명조직을 건설하는 데서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지 살펴 보겠다.

정선영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5월 23일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법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연대체에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물론 국내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운영돼 왔다. 대형 병원들 사이의 경쟁은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수익성 논리를 좇도록 유도했고 이는 의료비 상승과 노동자 임금인상 억제로 이어졌다. 소규모 병의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피부미용 시술에 열을 올렸다.

그래도 지금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가로막혀 있고,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는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직간접적인 감시·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 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이런 기본적 규제마저 사라지고 적나라한 시장 논리에 따라 의료 공공성은 사라질 것이다.

대못질

인천 송도에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장은 아니어도 국내 의료기관들이 ‘역차별’을 문제삼아 의료민영화를 요구할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다. 한미FTA는 이런 공격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저지를 KTX 민영화 반대 등과 함께 올 여름 노동자 투쟁의 주요 요구로 상정하려 하고 있다. 좌파는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동참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러려면 올 여름 다양한 부문에서 벌어질 노동자 투쟁들이 서로 단결하고 연대하도록 투쟁들 사이에 가교를 놓아야 한다.

아래로부터 노동자 투쟁이 성장하고 광범한 지지 여론이 결집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못질을 좌절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차기 정부도 쉽사리 이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인천의 지역 단체들은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인천시장 송영길에 압력을 넣어 영리병원 설립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과 영리병원 설립을 시작한 정당이고 송영길은 이를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장본인이다.

송영길은 최근에도 “송도국제병원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접근성과 환자 유치에 최적합지”라며 영리병원 설립을 지지했다.

6~8월로 예정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 투쟁의 일부로서 민주당에 독립적인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호중

혁명조직은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해

이처럼 동요하는 사람들을

선진 부위로 끌어당겨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구체적인 현실,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적 경험,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민주적 토론과 행동을 통해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00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촛불 시위 이런 대중 행동을 고무하고 투쟁을 일관되게 전진시키려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고려대 한대련 탈퇴 총투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

고려대 총학생회가 6월 초 한대련 탈퇴 총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총학생회 선거에서 현 총학생회 경향은 지난해 총학생회가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총학생회라고 하기 보다 한대련 고대지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의견과 상충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평가하며, “학생들이 뿔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총투표로 한대련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비판에는 이해할 만한 점이 있다. 지난해 총학생회는 교육투쟁이 한창인 와중, 투쟁과 별 관계가 없는 한대련의 새내기 콘서트 장소 문제를 두고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 큰 반발을 샀다. 이는 교육투쟁에 열의가 없던 비운동권 학생회가 교육투쟁에 비협조적인 데 빌미를 제공했다.

한대련 내 주요 세력인 자주파 경향이

비민주적으로 행동한 이런 사례는 단지 지난해 고려대뿐 아니라 지난 몇 년 간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성공회대 총학생회의 한대련 가입 총투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최근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이후 열렸던 중앙위원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한대련 핵심 간부들이 가담하는 등 잘못된 모습을 보여 왔다.

한대련은 “전국대학생들의 단일하고 대표적인 대중조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민족자주’ 강령과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자주파 경향의 외피로 운영돼 왔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스탈린주의 정치가 있다. 스탈린주의 지지자들은 소련·북한 등과 같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호의적이면서, 그들이 관여하는 조직 내 민주주의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총련과 마찬가지로 한대련도 스탈린주의 지지자들의 비민주적 통제가 심하고, 자주파 강령과 이데올로기를 동의하지 않는 광범한 진보적 학생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한대련 초기에는 잠시 한총련과 다른 단체인 양 처신하느라 자주파 경향이 아닌 학생회도 공존하는 듯 보였지만, 2007년 무렵부터는 자주파 경향의 통제가 급속히 강화됐다.

더구나 최근 한대련이 반값등록금 운동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기는 했으나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합을 추구하면서 투쟁성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민주당에 무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선거 중심적 활동에 치중하느라 캠퍼스 점거 투쟁 등 전투적 투쟁 건설이나 노동자 투쟁 연대 등에는 소홀한 것이다.

따라서 한대련과는 다른 대안적인 진보적 학생운동체가 필요하다. 각 학생운

동 단체들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보장하면서, 서로 민주적 논의에 기초해, 학생들의 권익을 방어하고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차별과 억압에 맞서 공동으로 투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한대련을 탈퇴하려면 이런 대안 건설과 연결돼야 한다. 그런데 자유주의 성향의 고려대 총학생회가 주도하는 한대련 탈퇴 총투표는 대안적인 진보적 학생운동체 건설과 연결되기 쉽지 않을 듯하다. 우파의 마녀사냥 분위기 속에서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한대련 탈퇴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개별 대학 울타리를 넘어서진 진보·개혁적 학생들의 전국적 연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그럴 바에야, 당분간 한대련 내에서 비판적·좌파적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원웅·정병호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6월 6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기아자동차

투쟁 준비에 시동을 걸다

최근 기아차지부는 ‘3무 원칙’(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 유연화 없는)에 입각한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결정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5월 4일 끝난 지부 대의원대회에선 주간2교대제에 관한 여러 혼란과 논쟁이 있었다. ‘3무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주간2교대제를 하지 말자는 소리다’ 등의 주장이 있었다. 나 역시 ‘임금이 조금 깎이더라도 우선 주간2교대제를 시행하자’는 견해였다. 향후 2~3년 투쟁해 임금을 복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적절치 않았다.

우선, 대의원대회 요구는 조합원·대의원들의 자신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화성 공장의 도장부 조합원 1천9백여 명은 ‘잔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측에 맞서 하루 1백여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주는 투쟁을 벌여 승리했다.

5월 17일엔 조립 3부 대의원과 반대표가 안전 사고가 발생한 데 대응해 4시간 가량 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들은 몇 년간 사라졌던 현장 조합원들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사측을 굴복시켰다. 안전 사고가 터지면 일단 라인을 세우고 대책을 논의하는 오랜 전통



여객 철교 공동투쟁을 결의한 현대·기아차 노조

을 복원한 것이다.

더구나, 좌파 활동가들은 ‘3무 원칙은 그저 이상일 뿐’이라는 주장에 맞서야 한다. 그것은 노사 협상의 타협점을 염두에 둔 제한적이고 협소한 관점이다. 3무 원칙을 분명히 내세우며 가장 전투적으로 싸워야 더 많은 것을 따낼 수 있다.

자신감

지금 현장의 투사들은 노조가 결정한 ‘3무 원칙에 입각한 주간2교대제 시행’을 제기하며, 자신감이 상승하고 있는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대중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한편,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세 명 중 한 명의 복직만 요구안에 포함시킨 것은 안타깝다.

다만,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다행이고, 복직 요구에서 제외된 윤주영, 이동우 동지에 대해서도 ‘집행부 사업’으로 복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동우 동지가 정규직지부에 현명치 않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정규직지부는 올해 투쟁에서부터 이 두 동지의 복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정규직지부 집행부가 하루 속히 이동우 동지의 조합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기아차 화성 공장에선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장 활동가 조직들과 부서별 선봉대, 개별 활동가 등이 모여 실천단 구성을 논의 중이다. 실천단은 야간 노동절폐, 사내하청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총파업 승리 등 4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건설하려고 한다.

기아차 지부 집행부 역시 5월 30일엔 2시간 파업을 통해 임단협 출정식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직접 참석할 것이고, 다음날 현대차의 출정식에는 기아차 배재정 지부장이 참석한다. 현대·기아차 공동 투쟁이 실질적으로 건설돼야 한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부산대학교

우리의 등록금을 부패 투성이 상업시설 빚 갚는 데 쓸 수 없다

2008년 부산대학교 김인세 전 총장은 효원E&C라는 회사와 계약해 수익형 민자 사업(민간사업자가 재원을 조달해 설계와 시공을 하고 그 건물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굿플러스라는 상업 시설과 학내 체육관, 기숙사 등을 지었다.

효원E&C는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이 대출금과 그 이자를 부산대가 떠맡게 됐다는 것이다!

김인세 총장 시절 학교가 어이없게도 효원E&C 대출에 보증을 섰고, 심지어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1백억 원을 담보로 걸었다. 김인세는 효원E&C와 사업이 해지되더라도 부산대가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부

담하기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8백억 원이 넘는 빚을 부산대가 물어야 할 지경이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학생들이 낸 기숙사비 20억 원이 학교발전기금으로 포함되면서 굿플러스로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고, 학교가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서 받은 학교 발전기금 18억 원도 굿플러스로 들어갔다.

효원E&C는 굿플러스 건설 당시 “공짜로” 주차장을 지어 주겠다고 했지만, 학교는 30년치의 주차비라며 70억 원을 효원E&C에 지급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돈 중 효원E&C 빚 갚는 데 사용된 금액이 벌써 1백억 원가량 된다!

검찰조사에서 김인세 시절 학교가 뇌물

을 받고 효원E&C에게 몰아주기 계약을 한 혐의가 포착되고 있다. 벌써 교직원 한 명이 구속됐다.

이번 문제는 학내 상업화에도 연관이 있다. 여러 학교들이 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학내 상업 시설을 유지해 왔다.

김인세 전 총장은 부산대를 망쳐놓고 뻔뻔스럽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산 전체를 망치려 했다.

상업 시설의 빚을 갚는 데 학생들의 돈을 절대 줄 수 없다. 김인세 전 총장의 비리를 확실히 밝히고 핵심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박준희 부산대학교 학생

건국대학교 총장 퇴진 투쟁 승리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의 전도사가 쫓겨나다

건국대학교 “뽕 총장” 김진규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교직원·학생들의 투쟁이 승리를 거뒀다.

이것은 김진규 재임기간 동안 계속돼 온 수많은 투쟁들이 이룩한 쾌거다. 학내 다양한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싸웠다.

많은 이들이 김진규 퇴진을 요구한 배경에는 그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대학기업화, 역겨운 부패와 비리,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있다. 김진규는 등장부터 교수·교직원의 참여 비중을 줄이고 학생들은 배제한 ‘총장 공모제’로 총장이 됐다.

그는 취임 직후 “맛있는 뽕을 먹으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해 “뽕 총장”이라 불렸고, 결국 취임 이듬해인 2011년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 인상을 감행했다. 학사 구조조정, 교수 업적평가 기준 강화, 폐강 기준 강화 등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김진규는 전임 총장보다 두 배나 많은 연봉을 받았다. 업무추진비, 진료수당으로 챙긴 돈만 2억 원에 가깝다. 경악할 만한 일이다.

2년 전에도 학생들이 총장 퇴진 투쟁에 나서긴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후 2년간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불만이 점점 커졌다.

특히 교수들은 업적평가 기준 강화로 엄청난 실적 경쟁에 시달리는 등 노동조건 악화에 분노했다. 지난해 교수협의회는 투표를 통해 총장 불신임을

결의했으나, 김진규는 자신의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러자 교수들은 올해 들어 총장 해임 권고안을 통과시키는 등 수위를 높였고, 교직원 노조도 총장 불신임 투표를 가결시켰다.

개교기념일인 5월 15일에는 교수·교직원 1백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학보에 사설을 쓰고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온갖 압력을 행사했지만, 구성원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5월 23일, 이사회 회의장 앞에 또 3백여 명이 넘게 모였다. 이 집회에는 학생들도 참가했는데, 충주 캠퍼스 학생대표자들도 상경했다. 좀 늦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임진용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총장 불신임 학생 투표를 실행하겠다’고 결의했다.

결국, 교수·교직원·학생의 단결된 항의에 겁을 집어먹은 이사회는 긴 회의 끝에 김진규 사퇴를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승리는 지금도 총장 퇴진 투쟁을 벌이는 카이스트, 서울여대 등에 영감을 줄 것이다. 건국대 교수·교직원·학생의 단결된 힘은 대학 신자유주의화와 학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투쟁이 가야 할 길을 보여 줬다.

건국대 당국은 비민주적 총장 선출제인 총장 공모제를 폐지하고, 교수·교직원·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건국대 교수·교직원·학생들은 이번 승리를 발판삼아 등록금 투쟁과 학사 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을 이어나가야 한다.

김소망 대학생다함께 건국대 모임



5월 23일 열린 총장 퇴진 촉구 시위 이날 건국대 이사회는 백기를 들고 김진규 사퇴를 결의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벌주의와 차별을 강화하는 복수전공 축소 반대한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서 복수전공 축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외대의 경우, 복수전공 제도는 한 캠퍼스에는 없는 전공을 다른 캠퍼스에서 이수하고 학위를 받는 제도다. 그런데 서울캠퍼스의 일부 학생들은 용인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통해 서울캠퍼스 졸업장을 받는 것에 불만을 가져 왔다. 특히 경영대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복수전공 이수자 때문에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고 복수전공 폐지를 요구안으로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 여건 악화의 책임을 복수전공 이수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진정한 책임은 이중전공 의무화와 복수전공을 통해 등록금 수입을 늘리면서도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학교 당국에 있

다.

그런데도 한대련 소속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용인 학생들을 속죄양 삼는 것에 앞장선 것은 매우 유감이다. 총학생회장은 5월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은 우리와 다르다, 복수전공 제도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다” 하며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복수전공 축소 요구안 통과를 주도했다.

‘다함께’ 외대 모임은 즉각 총학생회를 비판하고 학벌주의적 차별 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5월 23일에 열린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일부 중국어대 학생들과 함께 리플릿을 배포하며 복수전공 축소 요구안 삭제를 호소했다.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성사되지 못했

는데, 이는 서울캠퍼스의 상당수 학생들도 학벌주의 조장과 차별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총회에 참가한 학생들 가운데는 다수가 여전히 복수전공 축소 요구안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전학대회에 비해 복수전공 축소 요구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꽤 약해졌다. 나는 “교육 여건 악화의 책임을 용인 학생들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상정된 복수전공 축소 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생행진과 대학생사람연대 경향의 학생들도 내 주장에 공감하며 학벌주의적 차별 중단을 호소했다. 일본어대 학생회장은 “일부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글로벌캠퍼스 학우들을 ‘용귀(용인 학생들

을 바귀벌레에 빗댄 말)’라고 모욕하고 있다”며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서로 적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글로벌캠퍼스에서 복수전공 축소에 반대하는 요구안을 내걸고 총회가 성사됐다”며 “학교 당국에 맞서 함께 단결해서 싸우자”고 호소했다.

경영대 학생회장처럼 “용귀라는 용어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며 “기본도 안 된 복수전공 이수자들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 학생도 있었지만, 복수전공 축소 요구안을 지지했던 다른 발언자들은 전학대회 때와는 달리 노골적으로 학벌주의적인 주장을 폐기를 부담스러워했다. ‘다함께’ 외대 모임과 진보적 학생들이 복수전공 축소 요구가 학

벌주의적 차별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듯했다.

총회 무산 이후, 중국어대 한 학생은 “원칙 있게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지속돼 온 학벌주의적 분위기를 반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승산이 있고, 결국 우리가 옳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여전히 복수전공 축소 요구안을 추진하려 한다. ‘다함께’ 외대 모임은 다른 진보적 학생들과 함께 학벌주의와 차별을 강화하려는 것에 맞서 원칙있게 싸워나갈 것이다.

양유진 대학생다함께 외대 모임, 중국어대 학생회장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6월 6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전교조

성과급 균등분배를 확실하게 조직해 희망을 보여 주자

올해 정부는 교원 차등 성과급제를 더 확대했다. 등급 간 차액이 커지고, 학교 별 성과급 비중이 20퍼센트로 늘었다. 이것은 학교별 서열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특히 학교 내 진보적 목소리와 교사들의 자율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지난해 전교조는 학교별 성과급의 일부를 노동조합에 반납해 ‘사회적 기금’을 마련했다. 사실상 성과급 폐지 투쟁을 방기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교조 대의원 대회 등에서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잇따랐다. 그래서 올해 전교조 본부는 개인별 성과급은 분회별로 균등 분배하고, 학교별 성과급은 지부별로 균등분배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더 나은 투쟁 조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강원 지부는 차등 성과급이 폐지될 때까지 학교별 성과급을 누적하지는 누적 반납 결의 서명을 열의 있게 조직하고 있다. 강원지역 조합원의 60퍼센트가량이 이 서명에 동참했고,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누적 반납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성과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는 사례이자, 지난 2년 간 전교조 지도부가 성과급 폐지 투쟁을 방기하고 기금만 조성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누적 반납

그러나 누적 반납은 전교조의 대중적인 투쟁 방침으로 채택하기에 어려움도 있다. 전교조가 정부에 성과급 ‘반납’을 시도했던 2001년과 2006년의 ‘반납’은 반납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성과급을 폐지하고 반납액을 균등분배하라는 요구였다. 또 그것은 비록 정부가 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전국 4천4백11개 학교에서 교사 8만 1천6백2명이



5월 19일 전국 교사대회 교사들 사이에 서열을 매기고 단결을 저해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3백70여억 원을 모아 반납 투쟁을 한 실제적인 ‘대중’ 투쟁이었다.(2001년 수치)

아쉽게도 현재의 누적 반납 전술은 대중적인 투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누적은 정부에 성과급을 반납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의미보다는 임금을 조합에 쌓아 두는 성격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록 교사들의 불만이 크긴 하지만 현재 1인당 성과급 반납 대상액이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 성과급을 합쳐 2백45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흔쾌히 누적을 결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강원도 역시 누적 반납 대상액은 학교별 성과급만이다. 당장 성과급을 폐지하고 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적 했수가 늘수록 교사들은 성과급을 누적하는 데 더욱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누적 반납은 성과급을 폐지할 수 있는 대중적인 투쟁을 건설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강원도에서 누적 반납 서명이 널리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

람들의 성과급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증거다. 최근 전교조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 1위로 성과급이 선정된 것도 중요한 사례다.

전교조 본부는 이러한 교사들의 불만을 성과급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학교별 성과급을 지부별로 균등분배하기로 한 올해 전술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과급 투쟁이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회 단위의 균등분배보다 더 집중된 방식의 투쟁은 앞으로 투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소수 분회 등 균등 분배가 어려운 조합원을 역시 균등 분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전교조 본부는 성과급 균등분배를 확실하게 조직해 성과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희망을 보여 줘야 한다. 개인별 균등분배 역시 분회별로 분산된 방식보다는 중앙으로 힘을 집중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박태현 전교조 교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대 학보는 학교의 대변인인가

최근 이화여대 학보<이대학보>는 등록금 추가 인하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해 온 이화여대 총학생회를 문제삼는 동시에 진보적 학생운동을 깎아내렸다. 이 때문에 학내의 진보적 학생들은 분개했다.

학보는 총학생회의 천막농성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 ‘독단적이다’며 마치 비판여론이 쇄도한 듯 여론을 조성했다. 또, 타 대학 비권 학생회의 사례를 끌어들이 사실상 다음 총학생회 선거에서 비권 학생회 당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했다 아니냐를 떠나, 7천여 원이나 되는 적립금을 쌓아 놓고 3.5퍼센트만 ‘절감’ 인하한 학교당국에 맞선 총학생회의 등록금 추가 인하 요구와 이를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 천막농성이 장기화하게 만든 책임은 학교당국에 있다.

또, ‘운동권’이 문제라는 학보의 주장과 달리, 단호하게 싸울 때 우리는 학교 당국의 구차한 변명을 견어차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학보는 다함께 이대모임과 총학생회



이대에서 성공리에 치러진 KTX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이대 학보의 주장과 달리, 이 캠페인은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가 조직한 ‘KTX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깎아내렸다. 그러나 ‘KTX 민영화 반대’는 전체 노동자와 학생들의 이익에 충실한 요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학내에서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1시간 만에 4백62명이 동참했던 이 서명이 진정한 학생들의 여론이다.

우리가 ‘학보는 학교의 대변인인가’라

는 반박 대자보를 붙이자, 학보는 “[우리는] 특정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며 ‘중립’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보는 “3.5퍼센트 인하는 ... 최대한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학교의 입장을 그대로 실었다. 지난 4월 총선 때도 새누리당 후보의 인터뷰만을 실었다. 이것이 무슨 ‘중립’인가?

우리는 학보의 진보 운동 팸플이에 굴하지 않고 진보적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김승주 다함께 이화여대 모임

6월 6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영리병원 저지 토론회에서 알게 된 진실

나는 서울의 중소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요즘 근무하는 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인 것에 신물이 나 있었는데 송도 영리병원 추진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소식을 듣고 참가하게 됐다.

토론회에서 들은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올라가지만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선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 및 의료부작용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리병원은 투자받은 돈과 벌어들인 돈을 환자를 치료하는데 쓰지 않아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한국 병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병원 중 77퍼센트는 영리병원이 된다면 투자받은 자본을 병원 신, 증축에 쓰겠다고 했다.

한국은 이미 의료의 상업화가 심각한 상태다.

송도에 생길 영리병원 사업에 동참하려 하는 서울대병원은 의사가 환자 3, 4명을 한 진료실에서 동시에 진료하

고, 환자는 의사에게 질문도 못 해보고 진료가 끝나버린다.

교수들은 새벽까지 수술하고, 비싼 검사장비인 MRI로 하루종일 환자를 찍는 과잉진료를 일삼는다. 병원규모는 커졌는데 직원수는 그대로고, 비정규직 비율은 늘었다. 노동강도 강화로 퇴사가 빨라져 신규간호사 평균 근무년수는 1.7년밖에 안 된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이런 일이 더 악화될 것은 뻔하다.

한국의 자본이 영리병원을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것이다. 현재는 병원 자본이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과 여러 규제장치 때문에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 나서길 꺼리지만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설립을 시도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을 때 제주도영리병원을 막아낼 수 있었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속적인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종우



5월 23일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 생명을 돈벌이 수단 삼는 영리병원을 막아야 한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동부 공개 토론회

중국 지배층의 분열과 저항 운동

연사: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일시: 5월 3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건대 여성능력개발원 3층 2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10-5731-7299

서울 서부 공개 토론회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 심화와 한반도

연사: 김영익 <레프트21> 기자

일시: 5월 3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미산 마을극장
(6호선 망원역 1번 출구에서 우체국사거리 방향 5분 거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133-8896

서울 남부 공개 토론회

프랑스와 그리스의 '1% 대 99%' — 고조되는 유럽의 위기와 저항

연사: 최용찬<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사과정, 독일 베를린 경제대학 세계화와 노동정책 석사과정 졸업> (총비 자본주의) 공역자

일시: 2012년 5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역 12번 출구 다이소 건물 8층 토론모임공간 모토 5실

참가비: 4천 원

문의: 010-9401-1370

서울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이후 유럽 긴축 반대 운동의 전망과 과제

연사: 정병호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5월 30일 (수) 오후 7시

장소: 이화여대 포스코관 260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부산

87년 6월 항쟁 25주년 — 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연사: 김문성 <레프트21> 기자

일시: 6월 4일 (월) 오후 6시

장소: 부산대 사회대 203호 강의실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331-1968



MB 낙하산들의 숨통을 조여 온 언론 파업

파업을 굳건히 지속하며 승리로 나아가자

언론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파업 대오를 유지하면서, 지지와 동참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MBC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입사 30년 차 최고참 기자들은 공개 선언을 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 김재철은 하루빨리 MBC를 떠나라” 하고 요구했다. KBS도 보직탐장 22명에 이어 라디오탐장들이 사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동참했다. 뉴스 메인 앵커가 파업에 가세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심지어 KBS 김인규 사장이 임명한 윤부조원 위원(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뉴스를 감시·분석하는 전문가) 6명이 언론 파업을 지지하며 전원 사퇴했다.

굳건한 파업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파업 기간인 2월부터 4월까지 MBC의 시청률은 19퍼센트가 떨어져 지상파 1등에서 쫓겨났다. 광고 수입도 20퍼센트나 하락해 지난 석 달 동안 광고 수입 손실만 무려 4백억 원에 달한다.

사측은 궁지에 몰려있다. MBC 사장 김재철은 법인카드 7억 원 사용과 배임, 무용수 J씨에 대한 수십억 원 특혜 지원,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가 폭로되고 있다. 위기가 깊어진 이명박과 김재철이 합작해 MBC 노조 지도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단호한 파업 대오와 강력한 지지 여론에 법원도 부담을 느낀 것이다. 그러자 더욱 사기가 높아진 MBC 조합원들은 김재철 퇴진뿐 아니라 구속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파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는 언론 파업을 “불법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지만 같은 당 유승민은 “사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 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탄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조를 건설한 이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우며 역대 최장기 파업을 지속하



자문 이장기

5월 25일 언론 파업 승리를 위한 콘서트 낙하산 사장을 퇴출시켜야 공정 방송도 가능하다.

는 언론 노동자들이 사측과 이명박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 모든 성과는 언론 노동자들의 단호하고 끈질긴 파업 덕분에 가능했다.

출구전략?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일부 사람들이 ‘이제 파업을 중단할 때’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미디어오늘> 이완기 대표이사는 “파업을 위해 잠시 내려놓았”던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언론계 원로들도 파업 중인 노조 지도부를 만나 ‘사장 퇴진’에만 집착하지 말고 ‘공정보도’를 위해 복귀하자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낙하산 사장의 퇴진 없이 공정보도는 요원하다. 한 MBC 조합원은 “2010년 보도투쟁을 한다고 파업을 접었는데 돌아가 보니 현실은 변하지 않았

다. 기껏 써 봤자 데스크에서 다 자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와 낙하산 사장들이 악랄한 대량 징계와 해고, 탄압 세례를 퍼붓고 있는 지금 ‘사장 퇴진’ 요구를 거둬들이고, 복귀한다면 더 커다란 보복만 당할 것이다.

2010년 MBC 노조가 지방선거 “공정 보도”를 이유로 파업을 접자, 김재철은 곧바로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했고, 노조 간부들에게 징계, 감봉 조치 등 대량 징계를 내렸다. 또,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지금도 김재철은 대규모 인사개편으로 친정체제를 만들고 시사교양교 폐지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재철 퇴진 없이 공정보도는 불가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낙하산 사장이 퇴진해도 새로운 사장이 더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무리한 사장 교체” 요구보다 방

송법 개정에 초점을 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사회와 사장을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에 따라 임명하게 돼 있는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낙하산 퇴진과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낙하산이 물러나면 이후에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다.

특히, 기자 계약직화, 예능·드라마 전면 외주화 등을 천명한 김재철이 퇴진한다면 외주화를 중단하고 계약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1992년 MBC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국장추천제를 폐지하고 국장 해임 건의제 도입과 사장 최창봉을 퇴진시켰듯이 말이다.

반면, 지금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일부에서 나오던 방송법 개정 이야기는 급세 쑥 들어갈 게 뻔하다. 투쟁의 압력도 없는데 저들이 알아서 애쓸 리가 없지 않은가.

따라서 ‘낙하산 퇴출’보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파업을 접자는 이른바 ‘출구전략’은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 파업을 굳건히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승리가 멀지 않았다

판돈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 권영길 의원은 “언론사 파업은 정권과의 싸움이다”라며 사회적 연대 강화를 주문했다. 그동안 언론 파업은 여소야대 실패로 낙담하고 있던 진보진영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다른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하며 민주노총이 준비하는 파업의 선봉 구실을 했다.

언론 파업이 승리한다면 쌍용차 투쟁에도, 6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 등에게도 큰 활력과 자신감을 줄 것이다. 따라서 언론 노동자들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에 더 강력한 연대를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은 6월 말 파업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라도, 언론 파업을 승리로 마무리짓기 위한 대규모 연대 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3월 22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함께가 주도해 발의했던 ‘언론 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 같은 연대 계획은 지금 더 필요해 보인다.

한편, 언론 노동자들은 5월 16일 MBC 조합원들이 ‘시용기자’(경력기자) 채용을 막기 위해 보도국 항의 시위를 벌였던 것처럼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위한 피케팅 등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필요도 있다.

사회적 연대를 굳건히 하고 파업을 지속·강화한다면 승리는 멀지 않을 것이다.

최영준

국내 최대 규모 진보 포럼

마르크시즘 2012

7월26일(목)~29일(일)

장소: 서울 주최:노동자 연대 다함께

“국제 상황의 열쇠” 그리스에서 사회주의자가 방한한다

소티리스 콘토아니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당원이자 반자본주의의 주진자(노동자 연대와 격월간지(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정기적으로 경제 문제를 기고하고 있다. 마르크시즘 2012에서 유로존의 경제 위기와 내림 정책에 맞선 그리스 노동자 투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언사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성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경성대학교 교수

조영선 인권 교육 강사, <인권, 교문을 넘다> 저자

천보선 전교조 교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 연대 간사

하종강 전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그밖에 많은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적 학자와 예술가 등이 마르크시즘2012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김지윤 <레프트21> 기자 (일명 '고대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의사

흥미진진한 주제들

다시 격화되는 경제 위기

세계경제 전망 : 왜 유럽이 위기의 전망지가 됐는가 | 중국 자본주의와 위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자본주의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하는가 | 착취란 무엇인가 | 시공은 효율적인가

경제 위기가 정치적 양극화로 — 세계적 위기, 세계적 반란

이집트 혁명 — 팽가과 전망 | 유럽의 정치양극화와 노동자 투쟁
발흥하는 파시즘 — 파시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가

경제 위기와 제국주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이후 — 이란에 대한 전쟁 압박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인도주의 개입의 실패

동아시아와 한반도

침몰하는 동아시아 불안정과 한반도, 제주 해군기지 — 안보를 위해 평화는 폭파되도 되는가?
오늘날 중국의 급부상 |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인가 | 김정일의 북한은 어디로?

대선과 반우파 정치 대안

대선과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 연립정부, 약인가 독인가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까지 — 마르크스주의적 평가
통합진보당 위기 이후 진보정치 운동의 전망

노동계급의 귀환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전망과 과제 | 프래카리이트가 새로운 투쟁 주체인가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 | 왜 노동운동이 중요한가

▶ 오늘날 진보운동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과 주제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이론과 실천을 다룬 책과 논문이 소개됩니다.
▶ 모든 참가자에게 3~4명의 발간권이 보장됩니다.
▶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서 확인하세요.

일한 방학·일한 휴가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
지금! 참가신청하세요

참가비 : 하루 13,000원 / 나흘 40,000원
대형인 : 하루 11,000원 / 나흘 30,000원
청소년·이웃노동자·장기투쟁자(연장 노동자) : 하루 5,000원 / 나흘 15,000원

단체 할인 : 10명 모이 할인 받기
학생, 노동조합, 동아리 등 10명 단체에서 10명 이상이 등록하면 나흘 10% 할인, 15명면 15% 할인, 20명면 20% 할인.
(단체할인 34,000원 / 대형할인 35,000원 / 청소년·이웃노동자·장기투쟁자 12,000원)